

Left21.com

제112호 | 2013년 9월 30일 ~ 10월 13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드러난 대국민 복지 사기극 돈은 있다. 부자한테 거둬라!

조세도피 830조 원,

기업유보금 820조 원

▶ 관련 기사 2 ~ 3 면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9월 26일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대표적인 복지 공약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확정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예산도 3분의 1만 반영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보육 예산도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식이면 불과 한달 전 벌어진 서울시 보육 예산 고갈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63퍼센트에게만 20만 원씩 주고 7퍼센트는 차등 지급하고 30퍼센트는 아예 안 주기로 했다. 그나마 20만 원씩 받는 대상자도 점점 줄어 3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깎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이 깎여 노후를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노동자

대다수는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을 몇 백만 원씩 받는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8만 원밖에 안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이 3분의 1이나 삭감돼 앞으로 이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전체 노인의 30퍼센트는 알아서, 70퍼센트는 20~40만 원 정도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부터 20만 원(소득대체율 10퍼센트)으로 인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박근혜의 기초연금은 사실상 이를 삭감하는 개악이다.

박근혜는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핑계를 댔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면 자녀 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연금이 최저생계비에도(1인 가구 57만 원) 한참 못 미쳐 사실상 부족한 비용을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면으로 이어짐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민주화가 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
위대는 사회 분열과 전복을 꾀하는 세력”
“이 시점에 [현대차노조]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 발전 안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의 말말말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
자는 RO 조직원일 맞죠?”

국정원 신문 중, 언론은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언론에 따르면’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는 거 아니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신문에서
‘혁명동지가’를 들려 주며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
다.”

우파 뺑치는 민주당 조경태

“[전두환이] 광주에서 사람을 살상한
거, 군사반란을 일으킨 거 그건 국민들
이 다 용서해 주셨다.”

검사 출신 변호사 정태원, 누가 언제?

“일본인 대리업자[의] … 껌에 빠져 많
은 여성이 해외 취업에 지원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여성의 자발적 선택?
국사편찬위원회장 내장자 유영익이 감수한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의 궤변

“정치권과 학계 일부로부터 인민재판
을 방불게 하는 공격을 당했다.”

교회사 교과서 각정하는 (조선일보)

“한대련이 쫓불을 시작한 6월 말 내가
살고 있는 자취방을 ‘낯선 남자가 지켜
보고 있었다’고 옆집에서 주의하라고
했다.”

한대련 김나래 의장

“‘대머리 수사관’은 원하는 답변을 제
가 안 해 주면 저를 일시켜 세우고 머
리를 주먹과 물병으로 때렸어요. … 제
가 오들오들 떨면 발로 다리를 차고 세
웠다 앉혔다를 반복시켰습니다. … 머
리를 벽에 찼었어요.”

‘공무원남매간첩사건’ 조작에 대한
여동생의 증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14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15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오아시스빌딩)	19:30~20:3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16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목요일 (다음호 가판은 10월 18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4~16일)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월요일 12:00~13: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월요일 11:50~12:50
원광대 학생회관 로비	월요일 11:30~12:30
고려대(안양)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인천대 학생회관 입구	화요일 12:30~13:3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수요일 12:00~13:0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수요일 11:45~12:45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반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박근혜 정부가 9월 26일 2014년 예산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1백조 원을 넘겼다
며 자화자찬하지만 들어나는 복지 예산
6조 6천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은 공적 연
금 증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자동
증가분이다. 여기에 공약을 파기하며 턱
없이 부족하게 책정한 기초연금 증액분
2조 원과 보육비 7천억 원을 빼면 나머지
복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박근혜는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
폐기를 사과했지만 사과해야 할 것은 그
것만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사실상 폐기했다.
교육부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 국가장학
금 예산 1조 6천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책정된 금액은 겨우 4천억 원에 그쳤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
직 6만 5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예산도 배정되
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
급식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비는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치게 책정됐
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30퍼센트 늘어나
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허리띠
를 졸라 매라는 것이다.

게다가 하위 공무원의 임금은 불과
1.7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6년간 공무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돼
왔는데 말이다.



전도사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모자라 거짓 공약까지? 9월 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정부는 이처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한 공약은 폐기하면서 기업을 지
원하는 돈은 대폭 늘렸다. 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은 전년 대비 24.3조 원이나 확
대했다. 이 돈이면 약속한 대로 기초노령
연금과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모두
실현하고도 남는다.

건설회사들에게 퍼 주기 예산인 민

자유치건 설보조금도 급격히 늘었
다.(2013년 6천5백억 원에서 14년 1조
1천6백억 원으로 78.4퍼센트 증가)

친기업 · 반노동 정책에 맞선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경찰력은 2017년까지
2만 명 늘릴 계획이다. 경찰과 검찰 등
에 배정된 예산은 7천억 원가량이나 늘
었다.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
며 ‘헌법 정신’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청 축소 · 은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 국
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한 당시 국정
원 차장과 심리전단장 등을 애써 기소하
지 않으려 하며 살짝만 들춘 것일 텐데도
그렇다.

먼저 국정원이 대선 훨씬 전부터 정치
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직원들에게 “국정에
개입 안 할 것이었으면 국정원이 이렇게
큰 조직으로 있을 필요도 없다”며 각종
공작을 지시한 것이다.

박근혜는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이 박근혜 캠프의 홍보 글을 퍼 나
른 것도 밝혀졌다.

대선 기간 중 댓글 사건이 폭로되자 당
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 권영세와
박근혜 ‘뒷발’ 대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한 서상기는 국정원을 매개로 서울지방
경찰청장 김용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
고받았다. ‘대선 개입 혐의가 없다’는 중
간수사결과를 만들어 내느라 그랬을 것
이다.

짜맞추기

게다가 경찰은 발표 효과를 극대화하
려고 증거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발표 시
점(마지막 TV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부
터 잡았다. 활을 쏜 뒤에 과녁을 그린 격

으로 미리 정해진 수사 결과에 증거를 짜
맞춘 것이다.

반면 원선의 외압을 폭로한 수사책임
자 권은희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는
말을 듣고 최근에도 경찰청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연이은 수모를 겪고 있
다.

국정원 공작은 결코 선거에 국한되지
도 않았다. 국정원 차장은 재판정에서
“[국민들 생각이] 오염되면 치료가 어렵
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
하다”고 지껄었다. 심리전단장 역시 재
판정에 나와 자신들의 활동은 “종북세
력의 국정 폄해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
어서 구체적인 타깃이 없다”며 사실상
어떤 내용이든 공작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끼리는 “야
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
야지”, “판사도 적”이라는 소리를 지껄이
고, 그 직원은 대선 당시 온 국민이 주목
한 경찰 수사에서 ‘원선을 지키려’ 허위
진술한 게 놀랍지 않다.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개치
고 다닌 것도 아니다. 국정원은 특히 노
동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지난해 노
조 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건설팅의 문
건에서 국정원 처장의 연락처가 나온 것
은 우연이 아니다.

이 정부가 검찰총장 채동욱을 쫓아내
려고 벌인 작태를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
은 추악한 진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김종환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
수와 연구자들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낸 성명(본지 111호 참고)에
서명자가 점점 늘어 총 2백5명이 됐다.
(9월 27일 기준)

이 성명에는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대), 브루스 커밍스(미국 시카고대), 찰스
암스트롱(미국 콜럼비아대), 《북조선 탄
생》 저자, 오언 밀러(영국 런던대), 서재
정(미국 존스홉킨스대), 에드워드 베이커
(미국 하버드대), 구해근(미국 하와이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저자, 백태웅(미
국 하와이대), 조지 카치아피카스(미국
웨트위스대), 신현방(영국 런던경제대)
등의 교수와 연구자 들이 참가했다.

성명서에서 연구자들은 “국정원이 정
치적 반대파를 내란 혐의로 고소”하고 다

시급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어 휘두르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 관련기
사 8·9면

그러면서 “소수 민족주의 좌파 정치인
들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국가 정보 기
구가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그 조직을 개
혁하려는 요구에 직면해 다른 곳으로 관
심을 돌리려 하는 행위야말로 남한의 민
주주의와 시민적 권리를 가장 위협한다”

고 지적하고, “연설 · 사상 · 정치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하고 밝혔
다.(성명서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재미동포 시민단체들의 연
합 조직인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
망연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국정
원의 정치전면화를 비판”하는 서명운동
에 돌입했다.

미주희망연대는 성명서에서 “대한민
국의 민주주의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대
선 불법 개입과 교활한 ‘매카시즘’으로 죽
어가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 성명서를 영
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
어로 번역해 대대적으로 “해외 양심인”
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는 계획이다.

이현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촛불집회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범국민 집중 촛불집회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행동의 날 ‘민주찾기 1천 대행진’
10월 5일, 12일(토) 오후 7시 장소 미정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10월 19일(토) 오후 7시 장소 미정 주최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10월 19일(토) 오후 4시 장소 미정 주최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먹튀·사기로 드러난 박근혜 복지

▶ 1면에서 이어짐

장호중

더구나 젊은 세대도 나중에 받을 연금을 삭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로 이익을 얻는 것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현재와 미래의 기업주·부자 뿐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의 복지 공약 후퇴에 찔쩍 뛰고 있다. 그러나 사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 공약도 ‘2017년부터 90퍼센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박근혜가 ‘배째라’고 하는데도 국회로 복귀하며 백기투항한 처지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연금 개악 저지를 하반기 2대 핵심 대중투쟁 과제로 결의”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더 나아가 “철도, 가스 등 민영화 추진과 의료, 빈곤과 장애, 보육과 교육 등 복지 공약 후퇴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선언은 당장 투쟁과 연대를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가난한 할머니·할아버지가 힘겹게 폐지를 모으고 다니는 모습을 더는 보기 싫다는 게 모두의 마음이다. 이것을 박근혜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무참히 짓밟았다.

보편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가 답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명박이 깎아 준 법인세만 원상 복구해도 해마다 수십조 원이 마련된다. 추가로 깎아 주는 법인세 비과세·감면액만 연간 9조 원에 이른다.

기업들이 쌓아 둔 사내잉여금 수백조 원이나 조세도피처에 빼돌린 또 다른 수백조 원에 세금을 물리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무상의료도 당장 가능하다.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에서 정반대로 나타났다. 세계경제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 때문에 복지 재원 마련은커녕 오히려 세수가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부자 증세를 극구 피하

려 한다.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우파정권의 핵심 목표기 때문이다. 지난 3차 회동 때에도 박근혜는 “법인세는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소신”을 밝혔다.

사실 자본가들이 이윤 증대 목적에 비해 보면 노인들에게 ‘퍼 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선거 때는 열심히 노인들을 찾아다녔지만 실제로는 노후 복지에 특별히 인색한 까닭이다.

반면 평범한 노동자들과 청년들에게 노후 빈곤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자기 미래뿐 아니라 당장 부모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는 반발에 밀려 일부 물러섰던 노동자 증세(안세제개편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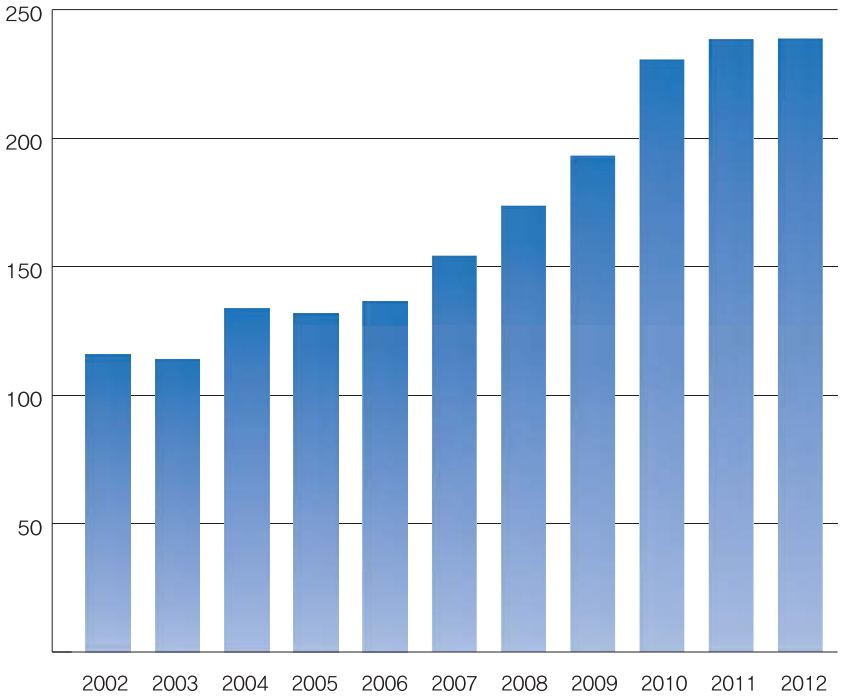
박근혜는 추석 직전 “국민들이 공감한

다면 증세가 가능하다”고 운을 띄웠다.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와 증세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노동자 증세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제개편안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 연금 삭감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부자 증세나 법인세 인상이 비현실적이라며 보편적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던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 준다. ‘노동자들이 먼저 세금을 더 내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박근혜의 먹튀를 돕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복지 후퇴, 노동자 증세에 맞서 복지 확대, 부자 증세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기업저축(단위 조 원) 한국은행 총재 김종수마저 '기업저축은 늘어나는데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 돈을 거둬 복지에 써야 한다.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김문성

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려고 한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15년간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범의노조로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저항에 밀려 몇 달 미뤘던 밀양 송전탑도 10월부터 폭력 강행할 조짐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치적 반동 속에서 복지 먹튀와 경제 위기 고통전이 정책도 본격화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노동자 증세,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등 각종 개악조치들이 줄줄이 발사대에 올라 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8월 28일에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국정 동반자”라며 손을 잡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박근혜는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며 ‘보수대연합’을 공고히 하려 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집권당 실제 김무성도 “역사전쟁”을 선포하고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파정권이 집권해야 한다”며 우파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역사·경제 교과서의 ‘좌편향’을 10년 전부터 문제 삼아온 선구자는 바로 재벌 총수들 모임인 전경련이다. 2008년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제작을 후원한 것도 전경련이었다.

우파 결집

요컨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은 보수화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쟁취한 민주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통합진

보당·전교조 불법화 시도가 대표 사례다.

그러나 그 약점과 모순도 봐야 한다. 노동운동의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고, 복지 먹튀는 광범한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 갈등에서 보듯 저들 내부에서도 반동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갈등이 있다.

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라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함께 힘을 모아 민주적 권리 방어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복지 후퇴, 노동자 증세 등에 맞선 분노들이 한 데 모이도록 정치적 초점을 제공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과제에서 운동이 약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 편의 분열과 약

점을 극복해야 박근혜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백기투항하듯이 국회로 복귀해 박근혜 돕는 결과만 내고 있는 한심한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제들은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도전할 태세가 돼 있는 좌파들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성격만 확인해 줄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였고 용두사미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이 왜곡·과장된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억지 기소가 가능한 것은 형법의 내란죄 조항들이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악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26일 오후에 한 것도 이 날 박근혜의 기초연금 공약 철회 뉴스의 비중을 줄이려는 꼼수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마녀사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보여 준다.

역사에서 배우기

미국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진실과 교훈

김준효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휠링 시에서 한 상원의원이 종이 문치를 치켜들고는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 제 손에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소련 공산당원 2백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이는 명단도 아니었고, 아무 내용도 없는 소품에 불과했다. 이 상원의원이 나중에 반공주의 히스테리의 대명사가 된 조지프 매카시였다.

매카시는 유대인 포로를 학살한 나치 전범을 옹호한 반유대주의자에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경쟁자들의 전력을 날조하는 수작으로 상원의원이 된 자였다.

이처럼 매카시는 미치광이였다. 그럼에도 ‘매카시즘’으로 알려진 반공주의 마녀사냥을 몇몇 정신 나간 개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린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 마녀사냥 뒤에는 미국 지배계급 전체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퍼부은 1945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다. 1945년 미국은 전 세계 석탄의 절반, 전기의 절반 이상, 석유의 3분의 2를 생산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세계 대전의 정치적·경제적 승리자로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기업 자본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다.

동시에 미국 지배자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1945년 말과 1946년 초에 미국 전역의 고무·철강·광산·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1946년 상반기에만 3백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난 이 파업은 미국 지배자들이 직면한 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운동이었다.

미국 민중만 저항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곳곳에서 식민 지배에 맞선 무장 반란이 일어났다. 아프리카에서는 대륙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에서는 민족해방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던 서유럽과 일본에서도 반란의 조짐이 보였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 강력한 공산당, 레지스탕스* 투쟁으로 단련된 투사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면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 후 전 세계에 몰아친 공산주의 혁명의 물결을 잊지 않았던 미국 지배자들로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 제국주의가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벌이던 경쟁이 냉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속에서 동유럽 전역에 소련을 모방한 위성 국가들이 들어섰다. 소련은 미국에 이어 1948년에 핵폭탄을 보유하게 됐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트루먼). 반공주의는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모두에서 자연스런 선택이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해리 트루먼과 FBI 국장 존 에드거 후버는 반공주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조직했다.

1947년에 통과된 태프트-하틀리 법이 그 출발이었다. 이 법은 연대 파업을 금지하고, 피켓라인* 고수를 불법화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은 금지됐으며, 살랭이 파업*으로 입은 피해의 책임을 노조가 지게 함으로써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이 법은 공산당원이 노조 간부가 될 수 없게 했다. 투사들은 노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자신이 공산당원이 아님을 밝혀야 했다. 이 ‘충성 서약’을 거부하면 해고당했다.



매카시즘이 공격한 것은 사회 정의를 향한 노동계급 투쟁이었다

1946년, 세계 최대 곡물 집산지 미네아폴리스에서 두 달 동안 공장을 멈추고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이 도로를 점거했다.

미국에서 공산당은 1930년대 전투적 노동운동 속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 1930년대 초반에는 미국 전역에 당원이 수천 명뿐이었지만, 몇 년 뒤에는 11개 언어로 신문을 발행하고 노조원 수백만 명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됐다.

공산당의 기층 투사들은 대공황 시기에 들불처럼 일어난 노동자 파업의 최선두에 섰고, 좌파적 노조연맹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 건설에 기여했다.

그러나 스탈린의 인민전선(계급연합) 전략을 받아들인 공산당 지도부는 루스벨트의 민주당과 뉴딜정책에 무비판적 지지를 보였다. 제2차세계대전 때 공산당 지도부는 파시즘에 맞선 전쟁에 방해가 될까 봐 무파업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기층 당원과 지지자들은 전쟁 기간 동안 수만 건이나 벌어진 살랭이 파업의 선두에 섰다. 이들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과 파시즘에 맞선 운동에서도 가장 효과적 투사들이었다.

후버가 작성한 ‘공산주의자’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투사들이었다. 명단에 올라가면 조사위원회에 출두해 ‘과거를 뉘우쳐야’ 했고, 다른 투사들의 이름을 대야 했다. 그들은 직장을 잃고 임대 주택에서 쫓겨났다.

오리

스페인 반파시스트 지지 운동이나, 흑백 분리 정책 반대 운동에 참가한 것도 공산주의자라는 증거가 됐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꺾꺾거리면 그건 오리”라는 일명 ‘오리 판별법’이 판졌다. 지배자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공격해 투쟁의 중핵을 파괴하고자 했다.

물론 지배자들은 그럴 듯한 명분을 대

며 마녀사냥을 정당화했다. 지배자들은 공산당원들을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소련 독재 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공격했다.

이 공격은 소련이 실제로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 소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억압·착취 체제였다. 공산당원들은 투쟁을 이끈 투사들이었지만, ‘적의 적은 친구’라는 생각 때문에 소련을 지지했다. 그래서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하기 힘들었다.

그 대신 투사들은 “공산당은 1백 퍼센트 미국주의(Americanism)*다”, “헌법을 어기지 않았다”,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탄압에 맞서면서,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이 방어에 동참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트루먼의 민주당 정부 자신이 탄압의 주체였다. 트루먼 정부는 “공산


레지스탕스 제2차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점령된 국가들에서 전개된 반나치 저항운동.
피켓라인 파업 노동자들이 벌이는 대체 인력 투입 저지 행동.
살랭이 파업 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 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벌이는 비공인 파업.
미국주의(Americanism) 미국인이 자국(미국)을 사랑하고 국익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프론티어(개척) 정신, 자유민주주의 등을 말하기도 한다.

주의자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모든 곳에서!” 같은 백문백답이 실린 소책자를 수백만 권 쏟아 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설립된 연대체의 창립자가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그를 연대체에서 제명했다.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면서 공산당원들이 끌려갈 때 방어 입장도 내지 않았다.

냉전

이때 냉전의 막을 올리듯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지배자들은 마녀사냥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은 ‘적을 이롭게 하는 자를 처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결집했다.

정부와 언론은 소련에 대한 공포감을 퍼뜨렸다. 대중 잡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따위의 기사를 써냈고, 초등학교에서는 “공습에 대비해”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밑으로 숨는 대피 훈련을 했다.

마녀사냥의 광기는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에 핵무기 관련 비밀을 넘겨줬다는 혐의로 사형당했을 때, 그 참혹한 절정에 이르렀다. (로젠버그 부부 마녀사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본지 웹사이트에 재게재된 ‘냉전기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속죄양 로젠버그 부부’를 참고하십시오.)

매카시도 이 물결을 탔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마녀사냥이 어찌나 철저했던지, 중간에 끼여든 매카시는 정말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 공격해야 했다. 심지어 나중에 그는 군대도 공산주의 소굴이라며 날뛰었다.

매카시가 날뛰는 것을 이용해 의회 내 다수파가 된 공화당은 매카시가 군대를 비난하자 그를 의회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이미 두 명이 사형당하고, 수백 명이 투옥되고, 2만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난 뒤였다.

헌신적 투사들이 소련에 대한 혼란 속에 민주당에 의존하다가 제대로 된 방어도 못 해보고 무너졌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미국 노동운동은 이후 후퇴하며 민주당에 더 종속됐다.

작업장을 덮친 마녀사냥

마녀사냥 열풍 속에서 숙청된 사람들 중 단일 최대 집단은 전투적 파업으로 명성이 높았던 항만 노동자 3천여 명이였다. 공공기관 중 최대 집단은 강력한 노조를 건설한 전투적 흑인 집배원 노동자들이었다.

할리우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최초로 공격당한 사람들은, 당시 단일 노조로서는 영향력이 가장 컸던 영화배우조합에 속한 활동가들이었다.

월트 디즈니처럼 공산당이 조직한 애니메이션 파업 때문에 공산주의를 증오

하던 대자본가나, FBI의 밀정이었고 나중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되는 로널드 레이건 같은 영화배우조합 우파 지도자들이 할리우드 마녀사냥의 선봉에 섰다.

노조 상층 관료들은 마녀사냥에 적극 동조했다. 그들은 현장조합원들의 전투성을 통제하고 민주당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려 했다. 따라서 전투적 투쟁을 부담스러워했고 이를 주도하는 기층 투사들을 깔고러웠다.

노조 관료들은 기층의 좌파적 투사들과 공산당원들을 FBI에 밀고했고, 반공

주의자들을 결집시켜 노조 내 통제력을 강화했다.

지배자들은 이런 ‘전향’을 환영하며 널리 선전했다. 노조 관료들이 ‘과격파’를 무장해제하는 대가로, 정부와 사장들은 75~1백 퍼센트 임금 인상, 의료보험, 연금, 휴가 같은 ‘실리’를 제공했다.

이는 당시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대 호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0년대에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자 이런 ‘실리’는 눈 녹듯 사라졌다.

좌파적 노조연맹 CIO는 우경화하다가

1955년에 우파 노조연맹 미국노동총동맹(AFL)에 통합됐고, 통합 노조는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단체가 됐다. 엄청난 보수성, 관료적 태도, 실리주의는 노동조합의 대명사가 됐다.

이듬해 소련의 수장이 된 흐루쇼프가 스탈린의 만행과 소련 체제의 참상을 폭로하자, 이 모든 탄압에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던 극소수의 투사들마저도 무너져 내렸다.

이런 침체는 1960년대에 흑인 공민권 운동이 성장해 미국을 뒤흔들 때까지 계속됐다.

교과사 교과서와 ‘역사 전쟁’

‘일베충’ 수준의 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

한규한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전공
(박사과정 수료)

뉴라이트 사관의 교과서 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근혜, 교육부, 새누리당, 그리고 우익 단체들이 뿔뿔 뿔쳐 교과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과사 교과서 외의 나머지 교과서도 오류가 많이라며 전부 수정토록 했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교과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맞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심지어 우익 폭력 단체들이 군복을 입고 대학교에 난입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언급한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자 주진오 교수에게 사죄하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는 국사편찬위원회장에 뉴라이트의 대부격인 유명익을 내정했다. 역사에 대한 행패 부리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애초에, 인터넷 포털의 글들을 베껴서 낱림으로 만든 이 오류투성이 교과서가 교육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국가 권력의 후원 덕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이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교묘히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등의 독재자와 이들을 후원했던 미국 제국주의를 대놓고 찬양한다. 가히 ‘일베충’들이나 환영할 교과서다.

뉴라이트는 기존의 한국사학계가 너무 민족주의적이고 좌편향적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은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확산된 관점을 겨냥한다. 대체로 좌파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이 관점은 기존의 친독재, 친제국주의, 냉전주의적 역사관에 도전하고자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들어 한국사 교과서에 그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물론,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우익의 선동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뉴라이트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격을 통해 다시금 반동적인 역사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과사 교과서의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몇몇 핵심 요소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식민지 근대화론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는 자본주의가 절대적 선이라는 관념이다. 이 때문에 박정희의 독재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을 ‘근대화’시킨 일본 제국주의의 구실도 높게 평가된다. 이 교과서가 김성수 등 친일 자본가를 민족지사인 양 둔갑시킨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물론, 일제의 침략과 수탈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교과사 교과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언론인 〈산케이〉가 교과사 교과서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내비친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사 교과서에는 일제를 미화하는 코드가 곳곳에 심어져 있다. 예를 들어 철도와 각종 교통 시설, 수리 시설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착취적 성격은 은폐돼 있거나 축소돼 있다. 또, 빈농들의 삶이 파탄한 원인을 주로 인구 증가에서 비롯한 것으로 서술한다든지, 일제의 자영농 육성책으로 “지주제가 쇠퇴”했다는 식의 평가는 일제 시대 사회경제 구조의 착취적 본질을 흐리기 마련이다.



이승만 독재 타도를 외친 민중 우파는 이런 찬란한 기억을 우리의 머리 속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

심지어 위안부 문제도 교과사 교과서는 매우 무성의하고 축소해서 서술할 뿐 아니라, 전시하 인적·물적 자원 직접 수탈 문제도 매우 축소해 서술한다.

엘리트주의

뉴라이트가 칭송하는 근대화 주체는 엘리트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엘리트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제대로 추진할 만한 세력을 말한다. 이 때문에 뉴라이트는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에 적대적이다. 교과사 교과서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단지 근왕주의적 복고 운동이다. MBC 〈100분 토론〉에서 교과사 교과서 집필자 권희영은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민중 사학을 버리”라고 호통을 친 바 있다.

뉴라이트에게 근대화와 독립 운동의 정통 계보는 (친일)개화파 → 실력 양성론 → 외교 독립론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친일파 인사가 “일제의 협력을 통한 차별의 해소”를 도모한 현실주의자들로 복권된다. 심지어 교과사 교과서는 당시 조선인들이 징용·징병된 것까지 일제에 대한 직간접적 협력인 양 서술하며 친일파를 옹호한다.

이승만 숭배

식민지 근대화론과 더불어 뉴라이트 역사관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맹목적인 이승만 숭배다. 교과사 교과서는 마치 이승만

이 열강들에 조선 독립 청원 활동을 한 것이 항일 운동의 본류인 것처럼 과장한다.

뉴라이트에게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미국 제국주의에 편승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보며, 이승만이 ‘공산주의 세력의 본질을 꿰뚫어 본 국제정치의 달인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대중적 염원은 그저 남로당식 폭동쯤으로 치부된다. 당연히 4·3 항쟁의 기원도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학살당한 무수한 민간인에 대한 애도도 없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정취해 남한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 영웅이자, 심지어 4·19 혁명으로 망명가면서도 공산 세력의 침략을 걱정한 우국지사로 묘사된다.

냉전주의와 독재 찬양

교과사 교과서는 낡은 냉전주의를 새삼스레 반복한다. 제1·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사는 전체주의(파시즘과 공산주의)와 자유 세력 간의 투쟁사가 된 듯 서술한다. 교과사 교과서는 파시즘과 공산주의 간의 공묘 사례로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불비례적으로 크게 부각한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자유 진영’이 파시즘을 방조한 사실은 체계적으로 누락한다.

또, 교과사 교과서에 따르면, 냉전 시기 소련은 일방적으로 호전적이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은 본질적으

로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다.

미국이 지원한 그 많은 독재 정권들이 어찌하여 ‘자유 진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재 시절 한국도 자유 진영의 일원이었다. 뉴라이트가 보기에 한국전쟁은 제국주의 간 쟁투가 아니라, 공산 침략에서 자유 진영을 방어한 전쟁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과정에서 남한과 미국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축소되거나 아예 누락된다. 그 빈자리를 북한 의 보복 학살이 채우고 있다.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호전적인 구제불능 악당일 뿐이다. 당연히 미국 제국주의의 호전적 대북 압박은 서술되지 않는다. 역대 독재자들의 독재는 반공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정당화된다.

GDP 성장 제일주의

교과사 교과서의 저자들은 북한보다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유’와 ‘경제성장’을 내세운다.

물론 이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한 체제였다고 서술하는 게 공평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면에서 유신 독재가 김일성의 독재보다 나은 것도 없었고, 경제는 오히려 북한이 더 잘나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사 교과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의라는 개념은 희생되는 게 당연하다는 투로 서술한다. 예를 들어 베

트남 파병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성과는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민간인 학살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적반하장 격으로 권희영은 〈100분 토론〉에서 천재교육 교과서가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언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원조 뉴라이트 교과서인 2008년 《대안교과서》조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시인하는데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 교과서가 주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교과사 교과서는 “6·25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체제 이념을 놓고 다투는 일이 없게 되었다”고 단언한다. 즉, 과거 추악한 대한민국 지배 세력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없을 뿐더러 용납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뉴라이트 교수인 허동현은 교과사 교과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드라큘라 영생론’으로 ‘깔끔하게’ 옹호한 바 있다. 즉 “[드라큘라에게] 피만 빨린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으며, 드라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라는 드라큘라에게 물려서”라는 것이다. 이는 교과사 교과서가 전파하려는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자본주의에서 영생하려면 우리도 남의 피를 빼는 흡혈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사 교과서는 나라 안팎 노동자 민중의 피를 빨아 영생을 누리려는 한국 주류 지배자들의 교과서다. 이런 추악한 교과서는 수정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레포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과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가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선택할 때는, 교과협의회(학교 내 같은 교과 교사들의 협의체)의 추천과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채택 운동’ 주장은 자칫하면 학교장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그 기사는, 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간행한 역사 교과서의 2002년 채택률이 반대 운동 속에 0.01퍼센트밖에 안 났다는 점을 들어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새역모의 교과서 채택률은 일본 공식 정치 우경화에 힘입어

2006년에는 0.73퍼센트, 2012년에는 4퍼센트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수가 무려 1백 배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우익들도 올해 교과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지 않더라도 일본의 새역모처럼 채택률을 점차 더 높여 가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9월 12일 전교조를 비롯한 4백 65개 단체가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해, 교과사 교과서는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며 검정 취소를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또한, 이미 종교교 교사 7천8백66명이 교과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1차 교사 선언에 동참했다.

이처럼 교과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이번엔 당장 취소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채택률을 최소화하면서 다음번 검정 합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백은진

이산가족 상봉 연기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와 박근혜의 ‘실패 프로세스’

9월 21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말이다.

이 때문에 그리운 이들을 만나길 애타게 바랐던 이산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됐다. 60년 넘게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실낱같은 기회는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북한 지배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북한의 행태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의 카드로만 여기는 건 남한 정부도 북한 정부 못지않았으니 말이다.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일각에서는 박근혜식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기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는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불안정하며, 이 지역에서 언제든 긴장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북한은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 해 왔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경제적 실익을 얻겠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목적이 컸다.

남북 대화가 일정 진전이 있으면서, 북한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에 나섰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지렛대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있어야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을지프리트급가 다인 훈련 같은 대규모 전쟁 연습을 해 북한을 옥죄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대화의 선제 조건은 ‘북한의 미사일 · 핵실험 동결, 영변 핵시설의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진 출처: 청와대

“북 도발 땀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 강력 대응하라”던 박근혜 박근혜의 ‘원칙론’은 불안정을 키우는 데 일조해 왔을 뿐이다.

(IAEA) 사찰 허용, 추가 도발적 행동 금지’ 등인데, 이는 북한에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는 셈이다.

미국의 행보에 남한과 일본 모두 보조를 맞추고 있다. 9월 18일 중국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가하는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가 반관반민 형식으로 개최됐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 대표 등을 정식 대표로 보냈지만, 한 · 미 · 일은 모두 정식 대표가 아닌 옵서버(참관인)만을 보냈다.

게다가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시도하며,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약화된다면 다른 정권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려고 덤빌 것”이라며 북한을 계속 언급했다. 이 또한 북한을 상당히 자극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전략적 인내)를 지속하자, 북한은 상당히 조바심이 난 듯하다.

9월 11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는 위성 사진을 분석해, 8월 31일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위성으로 볼 것을 알면서 북한이 ‘흰 연기’를 피운 것은, 미국이 계속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다.

이처럼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고 남북 대화가 가다 서다를 거듭하는 것은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상황이 어려워지는 데 일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6자회담은 올해 안에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대화 제의에 계속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9월 초 국방장관 김광진은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커넥션(연계)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후 “북한이 중북세력과 연계해 ‘4세대 전쟁’을 획책하

려고 할 것”이라며 “현재의 대화국면은 [북한의] ‘전술적 대화공세’일 수도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 가운데 보수 언론들은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돈줄이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시도를 공격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근혜의 원칙론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는 사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찬물

미국이 오랫동안 북한을 압박하며 대화를 거부하자, 최근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정녕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진심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자 하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미국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니 말이다. 즉,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 동아시아에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 ‘위협’론을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지렛대로 삼아 왔다. 예컨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MD) 구축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일본 · 남한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북한 ‘위협’론은 큰 도움이 됐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은 동아시아 등지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벌이는 갈등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질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는 최근 동아시아의 첨단 무기 경쟁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신형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 준(準)항공모함 이즈모 호를 진수했다.

미국도 중국, 북한 등을 겨냥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목표물을 1시간 내에 타격할 재래식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항공모함 추가 건조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형세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온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주변에서도 최근 연이은 군사 행동과 맞대응이 이어져, 다시 긴장이 높아진 상태다.

동아시아에서 대외 갈등이 높아지자, 각국 지배자들은 이를 국내 억압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지식인 첸리훤은 중국 지배자들이 노동자 · 농민 운동 등을 “외부 적대세력의 대표, 혹은 간첩으로 취급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중국을 인터뷰하다》, 창비)

이런 상황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남한 지배자들도 대체로 이에 협조하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더 큰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미래는 점차 어두워질 가능성이 크다.

김영익

통상임금 논란

임금과 노동시간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법리 논쟁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 중 누구 편이냐 하는 계급 문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실제로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의 · 야간 · 휴일근로 등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근로의 가산 임금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본가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해 싼 값에 초과노동을 시키려 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그동안 여러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점 더 넓게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사법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유는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뒤집기 위한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박근혜 자신이 GM회장을 만난 뒤 이런 신호를 쏘았다.

자본가들은 기본급으로 지불해야 할 임금을 기형적인 방식으로 쪼개 냈다. 기본급 비중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 등 완성차 노동

자들의 평균 기본급은 1백50만 원가량밖에 안 된다.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퍼센트(현대차)밖에 안 된다. 반면 수당의 종류는 40여 개나 된다.

이 때문에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많이 제외돼 왔다. 그 결과 법정근로시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보다 초과근로시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이 더 적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취지 —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초과근로를 시킬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 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노동자들이 받을 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로부터 ‘저녁이 있는 삶’,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건강한 삶’을 빼앗고도 지불하지 않은 ‘장물’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임금 체계 때문에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으로 생활할 수 없어서 연장, 휴일, 특근 등 초과노동을 하느라 등골이 뻘뻘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건강한 삶과 스스로 생각하고 정치활동을 할 여유를 뜻한다. 이런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소외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노동시간이 줄어들어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가 없어야만 적절한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또다시 장시간 일해야 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초과노동 없이 기본급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급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 화해야 한다. 기본급의 액수 자체도 초과노동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높여야 하고, 불안정한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노동시간 단축인가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의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통상임금 판례를 뒤집으라는 신호를 준 것을 보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싼 값에 쓰려는 기업주들의 이해관계에 종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유연화 · 임금 감소와 맞바꾸는 방식이기기에 노동자들에게 해악적이다.

가령, 박근혜 정부가 확대하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은 보수를 받고 승진도 늦다. 공무원연금도 못 받는다.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시간제 확대 대상으로 꼽힌 영양사들은 ‘평균 급여가 1백50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하루 5시간만 일하라는 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시간제라도 지원할 사람들은 주로 양육과 병행하려는 여성들일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양육 부담이 계속 여성에게 남겨진 채, 여성 일자의 질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장시간 노동 관행이 굳어진 기존 일 자리를 쪼개는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안 역시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함께 도입하려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유연화를 결합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경총은 통상임금 논쟁을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 체계

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성과급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식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배부른 노동자’들만의 문제?

통상임금 쟁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지금, 노동운동은 임금 체계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력이 단단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이런 쟁점을 걸고 싸운다면 노동자 전체에 큰 힘과 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통상임금 문제를 ‘배부른 노동자’들의 문제로 취급하며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승소한 금아리루진 노동자들은 버스 운전사들이다. 이들처럼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환경미화원 노조 등 ‘고소득

▶ 7면으로 이어짐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운 의원은 “매각 금지 정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실제로 200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 양도를 제한한 회사의 정관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본의 사적 소유를 철통같이 지키려는 법원이 ‘투자 자본의 회수’를 부정하는 제도를 쉽게 허용할 리 만무하다. 정부가 이를 모르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는 그저 눈가리고 아웅하며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복지공약과 마찬가지로 부도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거듭 ‘민영화가 아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철도 안전에 필수적인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망쳐 가면서까지 법인을 분리하려 하는가. 게다가 왜 신설 법인의 철도공사 지분을 1백 퍼센트로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최근 수서발 KTX 법인은 “저비용 고효율 회사”로서, “연내에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량 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아웃소싱”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청와대는 경쟁체제 도입에 집중하는 모습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간경향>의 최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아직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으니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하는 일각의 주장도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철도공사 측과 함께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구성해, 법인의 경영 목표, 세부 운영 계획, 직원의 규모 등을 마련해 가며 민영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TF’를 구성해 일련의 분할 민영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특히 정부는 사장 재공모 추진과 노조의 파업 연기 등으로 긴장이 느슨해진 틈을 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자산 매각과 사업·노선별 분할 등을 위한 주요 제도 정비에 나섰음을 보여 준다.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 관련기사 16면

최근엔 철도공사 측도 다시금 1인 승무제 도입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노동자들의 대응으로 한 발 물러섰던 사측이 몇 달도 안 돼 또다시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은, 성공적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들끓나 재공모 절차를 밟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이로 인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다소 늦춰진 사이에도 민영화 추진은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결코 쉽사리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기세다. 오히려 최근의 기초연금 공약 폐기, 이마트·삼성전자서비스 사측 편들기 등에서 드러나듯,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방향은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내년 초 경제 위기 심화를 걱정하며, “공기업 부채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운운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간 지배자들이 주문해 온 “공공 사업의 최소화”, “강도높은 공기업 구조조정”일 것이다.



광범한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의 돌격대가 될 철도 민영화

부문을 뛰어 넘는 노동자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 8월 24일, ‘철도·KTX 민영화 반대 2차 범국민대회’.

정부가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에서 과거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자들을 추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총애”를 받으며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새누리당 최연혜는 철도공사의 초대 부사장을 역임하며 ‘수익 구조’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 등에 나섰던 자다. 총실한 ‘MB맨’으로 꼽혀 온 이재봉도 철도청의 상하분리(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의 분리)와 공사화를 추

진하며 분할 민영화의 기초를 닦았다.

따라서 이들이 내부 면전에서 국토부에 ‘무조건 총성’을 외치지 않았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에 대한 이들의 신념을 우습게 봐선 안 된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의 책임자를 낙점하는 낙하산 ‘코드 인사’를 단행할 게 너무나 자명하다.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이 끝나는데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측의 관련법 개정 추진, 야비한 거짓말과 꾀수, ‘코드 인사’, 구조조정 시도 등에 맞서며 민영화 저지 투쟁의 대열을 결집시키고 파업 태세를 갖추자. 강력한 투쟁의 힘이 뒷받침될 때, 정부의 미친 질주를 저지할 수도, 국회에서 민영화 추진의 진실을 들춰내며 정부를 궁색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박설

▶ 6면에서 이어짐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들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소송에 참여하는 더 많은 부분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노동자들일지라도 착취의 대가를 빼앗길 이유는 없다. 잘 조직된 정규직 대기업 노조가 통상임금을 넓게 인정받아 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도 유리하다.

무엇보다 통상임금 소송의 의미를 깎아 내리는 분위기가 되면, 통상임금 산정 범위 축소에 맞선 투쟁과, 이를 계기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기본급을 높이는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런 투쟁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투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은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배부른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노동부는 “통상임금 논란이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흘렸고, 이 때문에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듯하다. 저임금 사업장에서 기업주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임금 확대 요구가 문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기업주 탓이다. 통상임금 인정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둘 중 하나를 희생해야만 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즉,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투쟁하면서 그 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최미진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무기한 비정규직화’라는 또 하나의 먹튀

복지 공약뿐 아니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약속도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9월 5일,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 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진성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만 없을 뿐, 성과급·근속수당 등 거의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친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공무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해고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조차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무기한 비정규직”, “중규직”이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규직과 별도로 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무기계약직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정원 규제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1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극히 소수일 뿐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등 대다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파악할 생각조차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무 평가까지 통과해야 한다. 기간제법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고령자(55세 이상)·전문가 등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접고용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해명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알량한 무기계약직 전환조차 더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궤변적인 계획을 내놓고는,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며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훨씬 못 미치는 방안일 뿐이다.

또, 정부는 뻔뻔하게도 서울시·인천시 등 몇몇 지자체가 지난해 일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례도 마치 자신의 실적인 양 보도 자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예컨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 넘는 농성 투쟁 끝에, 그들 스스로 무기계약직화를 정취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책은 ‘속된 강정’일 뿐인데, 가장 최근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2015년으로 돼 있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조차 아예 삭제해 버렸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시·지속적 업무를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고용안정 보장,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데는 당장 무기계약직 전환마저도 회피하려는 공공기관들의 해고 조치 등에 맞서 현장 곳곳의 투쟁들이 중요하다.

소은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일감이 많을 때 추가 수당을 받지 않고 연장 근로를 하고, 그 수당을 저축해 뒀다가 일감이 적을 때 유급휴가로 받는 방식. 사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

성과급제

노동자들의 성과를 평가해 임금을 계약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압박하고 임금을 언제든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최일봉 노동자연대총회 운영위원장(아래 국정원악간자,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책갈피)의 저자

국정원의 영문명은 NIS, 즉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다. 하지만 실제로는 National Intimidation Service 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기관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intimidation, 즉 겁주기, 쫓게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이 기관의 옛 이름은 중앙정보부 KCIA였다. 유신 시대에 이 기관은 박정희나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 조직이나 지식인, 야당 정치인 들을 납치해 고문하고 감옥에 처넣는 일을 예사일로 했다.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사생활보호법 제정에 관심 있는 자유주의 학자였는데도 시위 주도자인 제자를 감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살해 당했다. 그의 동생이 중앙정보부원이었는데도. 그랬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김대중은 도쿄에서 납치돼 일본 알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다 기적적으로 구출됐다.

1970년대는 대학 안에 중앙정보부원과 형사가 상주하면서, 정보부원이 행사에게 지시해 학생을 연행하도록 지시하던 때였 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에 서울대생 네 명과 사립연수원생 한 명을 내란음모를 꾸며다며 연행해 구속했고, 1973년에는 박정희 비판 설교가 포함된 부활절 예배를 내란음모로 몰아 민주화 운동 목사들을 구속시켰다. 1980년 광주의 정당방위적 저항을 내란으로 몰아 김대중과 반독재 지식인 · 학생을 고문하고 구속시켰다.

이처럼 중앙정보부(—인기부—국정원)는 한국판 매카시즘의 전위였다. 미국에서 FBI가 매카시즘 시대(1950년대 초반과 중반 시기)와 1960년대 흑인 평등권 요구 운동 시대에 했던 중추적인 구실을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해 온 것이다.

특히, FBI가 1950년대 중엽부터 채택해 온 COINTELPRO, 즉 정보활동등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위해 했던 야당 후보 중상 · 비방 활동, 좌파 단체들 안에 첩자 심기와 분열 조작하기, 이들에 대한 유언비어 퍼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일벌백계

박근혜는 대선 때부터 국정원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 겨우 취임 초기인데도 국정원과 국정원급 출신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의 납북정상회담 발언록이라는 걸 공개하며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에 맞불을 놓

는가 하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경기지역 당원들의 모임을 내란음모로 몰아 진보당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도대체 장난감 총을 개조한 무기 값지 않은 무기로 엉성하게 무장한 1백30명짜리 부대가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쿠데타가 무슨 내란이며 국가 변란이라는 말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광범한 비판에 부딪히자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이 북한이라는 '적'과 합세해서 그러려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이 남한 지배자들의 단지 적일 뿐인가? 혹시 내부의 노동계급을 착취 · 억압하는 데서 친구이기도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문제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질문은 과연 북한이 연루된 전쟁일 핵전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다. 그런 전쟁에서는 핵무기에 의한 공멸이나 아니면 노동자 혁명이나 하는 선택만이 의미 있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이 소위 모의했다는 극소수 좌익 정예들의 쿠데타는 아무 효과 없는 단지 고결한 순교일 뿐이다.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의 1832년 6월 봉기 같은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영화 ‘레미제라블’의 마치 장 면에서 묘사된 아래로부터의 수백만 대중의 행동만이 핵전쟁을 막거나 끝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내란음모’였다는 이석기 모임이 실제로는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자. 이석기 의원 등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저항을 내란으로 몰아 김대중과 반독재 지식인 · 학생을 고문하고 구속시켰다. 이처럼 중앙정보부(—인기부—국정원)는 한국판 매카시즘의 전위였다. 미국에서 FBI가 매카시즘 시대(1950년대 초반과 중반 시기)와 1960년대 흑인 평등권 요구 운동 시대에 했던 중추적인 구실을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해 온 것이다.

특히, FBI가 1950년대 중엽부터 채택해 온 COINTELPRO, 즉 정보활동등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위해 했던 야당 후보 중상 · 비방 활동, 좌파 단체들 안에 첩자 심기와 분열 조작하기, 이들에 대한 유언비어 퍼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석기 모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 체성이 없고 그나마 실현 가능성도 없어 겉으로 봐봐도, 뉴욕 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인인 모의 대상을 선정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은 짜지 않은 것으로 모임을 끝냈다 해도 그 모임은 강도 음모로 형사 처벌된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석기 모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 체성이 없고 그나마 실현 가능성도 없어 겉으로 봐봐도, 뉴욕 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인인 모의 대상을 선정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은 짜지 않은 것으로 모임을 끝냈다 해도 그 모임은 강도 음모로 형사 처벌된다.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폭넓게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의 언론 재판도 도덕적 공황에 일조했을 것이다. 흔히 그러듯이 언론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시끄러웠고, 감정에 호소했고, 쓸데없이 논쟁적이었고, 고의로 둔갑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일부 사실들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작개심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무릇 도덕적 공황이란 휘발성이 강한 법이다. 공황은 일어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대중의 관심사나 언론의 뉴스거리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공황은 한국에서는 겉핥기하면 빨갱이 공포증을 동반한다. 은행 전산망이 일시 고장 나도 아무 증거도 없이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들’ 소환으로 아예 단정하고 나స్త다.(서구에서는 요즘 흔히 무슬림 공포증을 동반한다)

미국의 매카시 선풍은 가장 잘 알려진 빨갱이 공포증이다. 매카시 선풍은 제2차 빨갱이 공포증이라고도 불린다(제1차 빨갱이 공포증은 1919~21년에 조성됐다). 매카시 선풍은 1947~57년 공산당원 또는 그 출신자나 동조자에 대한 일련의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었다.

매카시라는 한 상원의원의 이름과 그가 이끈 의회 비미국민적 활동 조사위원회라는 기구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사건은 실제로는 미국 정부, 특히 FBI가 주도한 사건이었다. 특히, FBI의 설립자적 공세에 저항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했던 것이지만, 유추를 통해 깨닫고자 형벌 343조를 살펴보자. 강도 음모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빨갱이 공포증

매카시즘이라는 10년간의 빨갱이 마녀사냥으로 수백 명이 징역살이를 했고, 약 1만~1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모 두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이다.

징역살이를 한 사람 가운데엔 가족에게서 폭력배로써 폭행을 당해 죽거나 장애인 처형을 하는 일벌백계주의였다.

노동조합 관리들은 공산당원들을 노조 체성이 없고 그나마 실현 가능성도 없어 겉으로 봐봐도, 뉴욕 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인인 모의 대상을 선정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은 짜지 않은 것으로 모임을 끝냈다 해도 그 모임은 강도 음모로 형사 처벌된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냉전 매카시즘의 화생상이 된 로젠버그 부부.

제학자 폴 스위지 등이 큰 곤욕을 치렀다.

이런 마녀사냥 바람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좌익에게 등을 돌렸다. 가령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인권옹호협회(ACLU)는 단체 창립자인 엘리자베스 겔리 플린 거 후버라는 인물이 가장 정력적으로 마녀사냥을 주도했다.

자유주의자들의 배신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라면 그 말의 말뜻 그대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권을 당연히 옹호해야 하기 때문이거니와, 지금 우리 나라 상황에서 벌 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진보당 마녀사냥을 반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민주당과 NGOs 가 국정원의 진보당 마녀사냥에 대해 보이는 반동적이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라.

요즘 오바마가 미국 정부의 사찰 프로에 대해 쏘아내거나 적어도 노조의 주요 임무에서 배제했다. 그 덕분에 미국의 노동조합은 더욱 보수적이고 더욱 친사찰주의 이 됐다. 매카시즘으로 노동운동은 급속히 약화됐고, 단지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운동 부분뿐 아니라 비공산당계 좌파가 주도하는 노동운동 부분도 약화했다.

노동운동가뿐 아니라 지식인들도 마녀사냥을 당했다. 뉴욕 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잘 알려진 레너드 번스타인, 속에서 도덕적 공황과 빨갱이 공포증에 먹혀야 한다. 실제로 도덕적 공황이 있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석기 모임이 토론했던 것과 같은 행동이 사회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폭넓게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의 언론 재판도 도덕적 공황에 일조했을 것이다. 흔히 그러듯이 언론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시끄러웠고, 감정에 호소했고, 쓸데없이 논쟁적이었고, 고의로 둔갑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일부 사실들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작개심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무릇 도덕적 공황이란 휘발성이 강한 법이다. 공황은 일어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대중의 관심사나 언론의 뉴스거리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공황은 한국에서는 겉핥기하면 빨갱이 공포증을 동반한다. 은행 전산망이 일시 고장 나도 아무 증거도 없이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들’ 소환으로 아예 단정하고 나స్త다.(서구에서는 요즘 흔히 무슬림 공포증을 동반한다)

미국의 매카시 선풍은 가장 잘 알려진 빨갱이 공포증이다. 매카시 선풍은 제2차 빨갱이 공포증이라고도 불린다(제1차 빨갱이 공포증은 1919~21년에 조성됐다). 매카시 선풍은 1947~57년 공산당원 또는 그 출신자나 동조자에 대한 일련의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었다.

매카시라는 한 상원의원의 이름과 그가 이끈 의회 비미국민적 활동 조사위원회라는 기구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사건은 실제로는 미국 정부, 특히 FBI가 주도한 사건이었다. 특히, FBI의 설립자적 공세에 저항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했던 것이지만, 유추를 통해 깨닫고자 형벌 343조를 살펴보자. 강도 음모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이런 마녀사냥 바람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좌익에게 등을 돌렸다. 가령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인권옹호협회(ACLU)는 단체 창립자인 엘리자베스 겔리 플린 거 후버라는 인물이 가장 정력적으로 마녀사냥을 주도했다.

자유주의자들의 배신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라면 그 말의 말뜻 그대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권을 당연히 옹호해야 하기 때문이거니와, 지금 우리 나라 상황에서 벌 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진보당 마녀사냥을 반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민주당과 NGOs 가 국정원의 진보당 마녀사냥에 대해 보이는 반동적이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라.

요즘 오바마가 미국 정부의 사찰 프로에 대해 쏘아내거나 적어도 노조의 주요 임무에서 배제했다. 그 덕분에 미국의 노동조합은 더욱 보수적이고 더욱 친사찰주의 이 됐다. 매카시즘으로 노동운동은 급속히 약화됐고, 단지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운동 부분뿐 아니라 비공산당계 좌파가 주도하는 노동운동 부분도 약화했다.

노동운동가뿐 아니라 지식인들도 마녀사냥을 당했다. 뉴욕 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잘 알려진 레너드 번스타인, 속에서 도덕적 공황과 빨갱이 공포증에 먹혀야 한다. 실제로 도덕적 공황이 있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석기 모임이 토론했던 것과 같은 행동이 사회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폭넓게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의 언론 재판도 도덕적 공황에 일조했을 것이다. 흔히 그러듯이 언론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시끄러웠고, 감정에 호소했고, 쓸데없이 논쟁적이었고, 고의로 둔갑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일부 사실들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작개심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무릇 도덕적 공황이란 휘발성이 강한 법이다. 공황은 일어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대중의 관심사나 언론의 뉴스거리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공황은 한국에서는 겉핥기하면 빨갱이 공포증을 동반한다. 은행 전산망이 일시 고장 나도 아무 증거도 없이 북한이나 ‘종북주의자들’ 소환으로 아예 단정하고 나స్త다.(서구에서는 요즘 흔히 무슬림 공포증을 동반한다)

미국의 매카시 선풍은 가장 잘 알려진 빨갱이 공포증이다. 매카시 선풍은 제2차 빨갱이 공포증이라고도 불린다(제1차 빨갱이 공포증은 1919~21년에 조성됐다). 매카시 선풍은 1947~57년 공산당원 또는 그 출신자나 동조자에 대한 일련의 대대적인 숙청 바람이었다.

매카시라는 한 상원의원의 이름과 그가 이끈 의회 비미국민적 활동 조사위원회라는 기구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사건은 실제로는 미국 정부, 특히 FBI가 주도한 사건이었다. 특히, FBI의 설립자적 공세에 저항하는 방법에 관해 토론했던 것이지만, 유추를 통해 깨닫고자 형벌 343조를 살펴보자. 강도 음모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국정원 요원들에게 연행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다. 한국의 수출 1위국인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은 1997~98년 소위 외환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경제 대공황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여기에 중국 노동계급 운동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만 일 중국에서 제2의 뎀안뎐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번에는 노동계급 파업 사태를 동반하며 급속히 봉기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 되면 북한에서 소위 ‘유사 사태’(제도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 되면 일본군이 ‘집단지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주하려 할 것이고, 그리 되면 해묵은 민족 감정이 폭발해 반일 · 반미 · 반정부 투쟁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대외 지정학적 · 경제적 잠재 위험 요소 때문에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국가 대외 시민적 · 정치적 자유의 충돌에서 국가 편을 들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언론에 의한 재판이 한창이던 때 자유주의 · 개혁주의 세력은 우익의 손에 놀아난 셈이 됐다.

이런 실정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60퍼센트로까지 다시 올라갔다. 물론 주석연휴 직후 기초연휴,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전액 지원 등등 공약들을 파기하면서 아마 곧 다시 40퍼센트대로 내려 앉겠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집권 반년 남짓을 경험하면서 박근혜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봉착할 난관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대외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놓고

자유주의의 본질적 한계가 드러난 일로 볼

자유주의자들은 친북 좌파를 둘러싼 도덕적 공황과 빨갱이 공포증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강경 보수파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한반도에 진주하려 할 것이고, 그리 되면 해묵은 민족 감정이 폭발해 반일 · 반미 · 반정부 투쟁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실정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60퍼센트로까지 다시 올라갔다. 물론 주석연휴 직후 기초연휴,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전액 지원 등등 공약들을 파기하면서 아마 곧 다시 40퍼센트대로 내려 앉겠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집권 반년 남짓을 경험하면서 박근혜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봉착할 난관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대외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놓고

자유주의자들은 친북 좌파를 둘러싼 도덕적 공황과 빨갱이 공포증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강경 보수파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한반도에 진주하려 할 것이고, 그리 되면 해묵은 민족 감정이 폭발해 반일 · 반미 · 반정부 투쟁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실정 때문에 박근혜 지지율이 60퍼센트로까지 다시 올라갔다. 물론 주석연휴 직후 기초연휴,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전액 지원 등등 공약들을 파기하면서 아마 곧 다시 40퍼센트대로 내려 앉겠지만 말이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집권 반년 남짓을 경험하면서 박근혜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봉착할 난관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대외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놓고

자유주의자들은 친북 좌파를 둘러싼 도덕적 공황과 빨갱이 공포증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강경 보수파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한반도에 진주하려 할 것이고, 그리 되면 해묵은 민족 감정이 폭발해 반일 · 반미 · 반정부 투쟁이 폭발할 것이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친북 좌파를 둘러싼 도덕적 공황과 빨갱이 공포증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강경 보수파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한반도에 진주하려 할 것이고, 그리 되면 해묵은 민족 감정이 폭발해 반일 · 반미 · 반정부 투쟁이 폭발할 것이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FBI의 COINTELPRO에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성적 문란이라고 음해하는 언론 기사 작성 등도 포함했다. 또, 천재 물리학자이자 사회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찰과 좌파 단체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US)을 거짓말로 끊임없이 음해하고 조직의 내분을 조작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얻어버려뜨리기와 악성 댓글 달기 등 활동의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이번 마녀사냥 속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헌법 밖 진보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등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혼란과 문제점의 배경에는 국가를 보는 잘못된 관점과 태도가 깔려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국가를 바라보는 진보진영 내 여러 관점을 살펴보며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장한다.

국가를 잠재적 우군으로 보는 개혁주의

첫째는 체제를 좀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는 잠재적 우군으로 국가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개혁주의 진영은 중남미 좌파 정부들(특히 브라질의 톨라 정부의 집권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겼다.

남반구조점의 월든 벨로는 비록 글로 쓸 때는 좀더 신중했지만, 2002년 11월 한 토론회에서 IMF가 브라질 정부에 강요한 정책, 즉 [지출을 줄여] 재정 흑자를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경제 정책을 톨라가 수용한 것에 조건부 지지를 표했다.

톨라는 자신의 정부가 ‘이행기적’ 정부라는 말로 이런 행보를 정당화했다. 즉, 자신은 신자유주의를 탈피하길 원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타협은 톨라 정부를 신자유주의적 감옥에 갇히게 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권력이 있다. 톨라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브라질 해알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압력받아 양보를 거듭했다.

1960~70년대 영국의 윌슨 정부나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 같은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자본 도피와 외환 위기의 충격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날에는 단지 그런 공격을 하겠다는 공포심만으로도 중도좌파가 집권조차 하기 전에 ‘위싱턴 컨센서스’에 투항하도록 만들기 충분한 듯하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설령 어떤 개혁주의

정부가 그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꾀없이 버틴다 해도 자본가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더 있다. 우고 차베스 정부에 맞서 베네수엘라 부자들이 조직한 반란은 좌파 정부가 실로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줬다.

또한, 1973년 칠레 쿠데타는 좌파 정부인 살바도르 아옌데의 국민연합 정부가 군화발에 짓밟힌 사례다.

이렇듯 역사를 보면, 오래 전에 마르크스와 레닌이 내린 결론, 즉 국가를 사회 변혁의 도구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새삼 고개가 끄덕여진다.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분이지,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가 가하는 경제적 압력은 국가를 자본 축적이라는 지상 명령에 충실히 따르도록 떠민다.

더욱이 국가의 핵심부에는 군대, 경찰, 첩보 기관 등 강압 수단을 독점하는 상시적 관료 기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대상은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지배계급이다.

그렇다 해서 민중 운동이 어떤 정부가 집권하던 상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톨라 정부는 브라질 노동당의 대중적 기반을 이루는 사회 운동 세력들, 특히 조직 노동자들과 무토지 농민들의 압력과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 사이에서 빚어진 불편한 타협의 산물이다. 대중 운동은 자신이 집권을 도운 정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압력을 가하고 요구를 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



혁명 속에서 꽃피는 진정한 민주주의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열린 토론을 벌이는 러시아 소비에트 대표들.

민주주의를 최고조로 발전시키려는 혁명적 관점

개혁주의와 자율주의에 공통된 요소는 바로 체념이다. 둘 다 자본과 국가의 힘이 난공불락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 그런 탓에 국가를 사회 변혁의 동반자로 바라보려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회피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과 국가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이미 자본주의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힘이란 곧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엄청난 민주적 자기 조직화 능력이다.

이런 힘이 있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단연코 노동계급이다. 노동자들은 아주 작은 권익을 지키려 할 때조차 집단으로 조직화해야만 하는 존재다.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마비시킴으로써 체제의 혈류와도 같은 이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물론 자기 조직화 능력이 노동자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예컨대 중남미의 소농과 무토지 농민 운동도,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직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운동들 중 어떤 것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에 돌아간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지는 못한다.

과거에 투쟁이 절정에 도달했던 시기마다 노동자들은 기성 노동조합의 한계를 뛰어넘어 행동했다.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정치적 요구도 내걸고 대중 파업에 나섰다. 이런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동자들은 지역 수준과 전국 수준에서 노동계급 전

체를 결속한 조직 형태, 노동자 대의원들의 평의회를 기초로 한 새로운 조직 형태들을 개발했다.

이 조직 형태들은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 1936년 스페인 혁명, 1956년 헝가리 혁명, 1978~79년 이란 혁명, 1980~81년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 등 20세기의 거대한 반란 속에서 거듭거듭 등장했다.

노동자 평의회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락되는 그 어떤 민주주의보다 더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풀뿌리 대중의 참여, 주거 지역과 일터에서 이뤄지는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상급 단위의 대의원들이 자신을 뽑아 준 사람들에게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구조 등이 노동자 평의회들의 특징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지탱해 주는 중앙집중적이고 관료적인 권력 형태와는 다른, 대안적인 사회 운영 방식을 보여 준다.

자기 해방

천대받고 착취당하는 다수가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서다. 사실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운데 하나는 공공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대중 파업의 시기에 노동자들이 지방 정부의 기능을 대신 떠맡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평의회가 단지 지방 정부의 기능을 인수하는 데서 멈출 이유가 없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동자 평의회라면 그 나라 국가를 통째로 대체할 조직적 역량과 경제 권력을 쥐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 과업의 성패는 신생 노동자 국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자본주의 국가 권력 핵심부의 저항을 제압하느냐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근본에서 보면 조직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가 해체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국가가 강압적 힘을 동원해 대중 운동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신생 노동자 권력 기구 내에서 다수를 정치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중적 혁명정당의 궁극적 임무다.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 노동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권력의 마지막 보루를 급습해야 한다는 점을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것 말이다.

결국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혁명이란 소수의 쿠데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혁명이란 대중 파업 과정에서 탄생하는 노동자 민주주의 기구들을 단순한 투쟁 기구, 혹은 주요 자본주의 기관들에 대항하는 ‘반권력’을 넘어 대중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혁명은 결국 ‘권력 장악’일 수밖에 없다. 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국가는 서슬 퍼렇게 살아남아 반혁명의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국가의 전복은 소수의 음모가 아니라 평범한 대중이 스스로 사회를 운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대한 자기 해방 과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실현될 것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3년 3월호

번역 천경록

국가 문제를 회피하는 자율주의

반자본주의 운동 내에서 또 하나 우세한 관점은 어찌 보면 개혁주의의 정반대 편에서 있는 듯한 관점이다. 이 관점은 기존 국가에 의존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한다. 자율주의 진영이 이런 관점을 대표한다.

예컨대 《제국》의 공저자 토니 네그리는 “탈출과 도피” 전략을 제안했다. “권력은 외부로부터 사회에 침투한, 물리쳐야 할 적이지만 이제는 ‘정복하거나’ 장악’하기에는 쓸모 없는 대상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론을 가장 완성된 형태로 제시한 사람은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자 존 홀러웨이다. 그의 주장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라는 그의 책 제목에 잘 요약돼 있다.

홀러웨이의 결론은 무척 혼란스럽다.

한편으로 홀러웨이는 노동이 자본한테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도피란 일단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지배에 대한 거부, 지배의 도구(예컨대 기계)에 맞선 파괴와 사보타주, 지배로부터의 도주, 유목민적 형태, 탈출, 이탈이다.” 이 구절은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틀 속에서 대안적인 형태의 협동적 생산 활동을 벌이자는 네그리의 구호를 상기시킨다.

일례로 어떤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서 기업주들이 폐쇄한 몇몇 공장을 노동자들이 점

수해 운영한 사례를 마치 탈자본주의의 맹아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홀러웨이는 그래도 명색이 마르크스주의자인 만큼 이런 전략을 펼치더라도 생산적 자원은 대부분 여전히 자본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등장하는 대안적 경제 단위들이 자본금과 시장을 확보하는 방식에도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행위의 수단[즉, 생산수단 — 캘리니코스]이 자본의 손 안에 있는 한 행위는 교란되고 그 행위 자체와 대립하게 된다. 결국 몰수하는 자가 몰수당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를 논해야 할 대목에서 홀러웨이는 “행위 대상의 사물성을 해체하고 그것을 행위라는 사회적 흐름에 (재)통합시키는 것” 어찌고 하는 사변적 공상 세계로 숨어든다. 이 같은 형이상학의 안개를 걷어내려면 자본주의 구조들이 비록 인간의 노동에 의존해서 존속되고 재생산되기는 해도 그 구조들이 객관적 현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그런 객관적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려 해야 한다.

이는 분석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에 천착해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약점을 간파하기 위해서다.

운동 속의 논쟁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이번 마녀사냥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더니 결국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다시 한 번 한심함을 드러냈다.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공안 마녀사냥에 기대곤 했던 민주당이 매카시즘에 굴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당의 친자본주의적 한계를 보여 준다.

친민주당 자유주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국정원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둘 다 문제라는 양비론도 폈다. ‘국정원과 진보당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이 진보당 마녀사냥을 통해 득을 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보당은 득을 보기는커녕 국회의원 제명과 정당 해산 위협을 당하고 있다. 우익들은 진보당 인사들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목을 베는 퍼포먼스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공생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민중운동을 탄압해 온 대표적 억압 기구다. 그러나 진보당은 이런 국정원의 탄압을 당하며 기층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중운동의 일부다.

촛불집회나 노동자 투쟁의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진보당과 함께 촛불을 들거나 구호를 외쳐 본 사람이라면 국정원과 진보당이 ‘공생 관계’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 밖 진보”

다른 한편, 정의당 지도자 등 진보운동 내 개혁주의자들은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활동가들의 사상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아무것도 못 밝혀내 구속 기간을 늘릴 정도인데도 낙취록을 기정사실화한다.

박노자 교수는 “좌파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와 ‘주사파 포라이’가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세인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흠뻑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은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북한 관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문제



통합진보당은 민중운동의 일부다 국가탄압이아말로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가로막는다.

점은 “우리 사회를 폭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진보당 활동가들을 일면적으로 “낡고 시대착오적” 세력이라 치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개혁주의자들의 이런 태도에는 헌법과 체제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다.

심상정 의원이 “헌법 밖 진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정작 헌법도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도 않다.

또 국가를 중립적인 존재로 여기다 보니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요구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9월 26일 검찰이 내놓은 공소장과 중간수사결과를 앞서 국정원이 제시한 구속영장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사실 공안검찰이아말로 역대 마녀사냥의 주동자였다.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는 주장은 그런 점에서 옳지 않다.

또한 개혁주의자들은 북한의 억압적 지배계급과 북한을 모종의 대안으로 여기는 자주파 활동가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상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주대한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진보당 활동가들을 “광신교 종교 집단”인양 묘사하며 “감옥으로 보낼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계급적 기반과 실천을 떼어 놓고 정치와 사상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진보당 활동가들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항의 운동과 2008년 촛불항쟁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지금 탄압받는 활동가들이 우리 운동의 일부며 탄압이 겨냥하는 것이 진보운동 전체임을 보여 준다.**

지금의 국가 탄압을 방조하는 태도는 진보진영 전체에 도음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위헌 정당 해산이 이뤄지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모두 자격을 박탈하고 심지어 한 번이라도 당원이 있으면 자격 박탈 대상이 되도록 돼 있다.

진보활동가들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호시탐탐 때만 노린 전교조에 대한 공격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탄압의 칼날이 단지 ‘경기동부’나 진보당에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권은 복지 공약을 먹튀하며 재벌 퍼주기와 경제 위기 고통전

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권조차 짓밟으며 재벌·기업들의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 혈안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개혁을 위해서도 **시장논리와 체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도전에는 대중투쟁이 필요하고 단지 제도권 정치에만 머무르려 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승수 전 의원처럼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과 이념을 설정해야 한다”며 진보당과 선을 긋는 태도는 한계가 있다.

지배계급은 지금 마녀사냥을 이용해 진보운동을 향해 체제에 순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우파결집과 노동자대중의 분열을 노린다. 심상정 대표, 조승수 전 의원 등의 태도는 이런 책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시장논리

한편, 자주파의 일부인 인천연합 경향활동가들이 마녀사냥 반대 투쟁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들은 정의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비판한 후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감 있는 정치경향이라면 공식적으로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실천하는 게 옳다.

일찍이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지금 우리 운동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세다.

그런 점에서 일부 급진좌파가 혼쾌히 방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쉽다.

노동당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면서도 “협의의 입증은 검찰이 하고 죄의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며 탄압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에 서지는 않고 있다. 현재 노동당은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이하 공안탄압대책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은 여의도에 두고 있으면서 머리는 평양에 두고 있는 태도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사고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보당이 “특정 사상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준 부대표 역시 낙취록 내용을 두고 “사이비 종교의 집회나 다단계 회사 행사”이고 “심각한 일탈”이라며 비난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탄압이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공안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옹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는 … 민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라며 진보당의 노선을 “성찰하고 혁신하기 위한 공동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탄압에 맞서기’와 ‘자주파 비판하기’를 비슷한 비중의 과제로 제시한다. 이 때문에 사회진보연대도 아직 공안탄압 대책위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물론 실제로 진보당 지도부의 인민전선주의와 그에 따른 실천(민주당과의 야권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등)은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운동에 어려움을 줬다. 이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과 논쟁을 위해서라도 공안탄압에 실천적으로 함께 맞서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개혁 쟁취를 위해 자본주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려면 국가의 사상 단속을 좌절시켜야 한다. 사상과 논쟁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국가 탄압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 관련 기사 8 ~ 9면

김지윤 · 이현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우파 정부의 거짓말과 입막음에 던지는 돌직구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침몰과 정부의 원인 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정부측 천안함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좌초가 아니라 북한의 어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신상철 씨와 조선공학 및 구조·구난 전문가 이종인 씨는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예컨대, 프로펠러의 날개 다섯 개가 다 휘어져 있고 사고 추정 지역에 조개가 썰린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은 좌초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외에도 정부 측의 주장은 허점과 거짓말로 가득하다.

해저에서 발견됐다는 어뢰와 북한의 어뢰 설계도면이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뢰가 실제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2개월 만에 발견했다는 어뢰에 녹이 자욱한 데다가, 처

음에 발표된 사진과 실제 공개 어뢰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

침몰 직후 촬영한 TOD 영상에서 열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TOD는 열영상장비라는 뜻으로, 만약 정부 주장처럼 침몰 당시 폭발로 3천 도에 가까운 고열이 발생했다면 열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을 리 없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안수명 박사는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당시 사고 지점 125km 근방에서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구조 및 침몰 잔해 수색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해군은 침몰 이후 의도적으로 수색을 지연시키는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해군이 침몰 다음날 함수를 발견해 통보했으나 해군은 이를 무시하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민간 어선의 신고로 출동했

다. 해군은 신속하게 민간 어선에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종인 씨는 해군의 탐색 장비인 사이드 스캔 소나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실 해군이 의지만 있었다면 두 시간 만에 함수와 함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블랙 코미디

탐색 장비까지 언급하기 전에, 함수는 해안가에 떠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나중에 법정 공방 과정에서 함수 담당 해군 현장 지휘관은 떠 있는 함수를 보지 못했고, 함미 담당 해난구조대 대장은 함수를 보았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못지 못할 블랙 코미디를 연출한다.

또, 수색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한 주조 중위의 수색 지점은 이미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모두 발견된 이후였다. 그가

수색하던 지점에서 발견된 60미터 길이의 검은 물체는 동그런 해치가 달린 구조물로, 천안함의 부속물이 아니었다.

신상철 전 조사위원은 이 물체의 길이, 형태와 천안함의 파손 부위 모양을 근거로 이것이 천안함과 충돌한 제3국의 잠수함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온갖 논란과 의혹이 가득함에도, 정부는 문제 제기조차 가로막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항쟁과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고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고 천안함 침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미국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안함 사건을 이용했다.

이번에 많은 방해와 탄압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관람했다. 아직 남아 있는 소수 상영관에서 매진 열



풍이 불었고, 주요 포털에서는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감추려고 하는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 치열한 논란과 논쟁을 담고 있어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하다.

조익진

그리스

끔찍한 나치에 맞서 파업·시위가 성장하다

데이브 수엘

그리스에서 파시즘에 반대한 가수가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 당원에게 살해되자 파업을 동반하는 대규모 항의행동이 전국에서 연달아 벌어졌다. 9월 25일에 진행된 대규모 파업의 배경을 살펴본다.

이번 파업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래퍼 파블로스 파이사가 9월 18일 황금새벽당 당원에게 살해당하고 터져 나온 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이 파업은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력 감축에 맞서 거세지는 파업 물결의 일부기도 하다.

9월 18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48시간] 파업을 몇 시간 앞둔 새벽, 파블로스는 케라치니의 노동자 거주지에서 습격당했다. 황금새벽당 특유의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괴한들이 파블로스를 살해했다. 목격자들은 파블로스가 심장에 두 번, 복부에 칼에 찔렸는데도 경찰은 파블로스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한 황금새벽당 당원이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영감을 준 래퍼

사회주의자 래퍼 루카스 치미엘레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파블로스는 헌신적인 활동가였습니다. 파시즘에 맞서는 파블로스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을 고무했어요. 3년 전 그를 처음 만나 이후 함께 공연했어요. 파블로스는 항상 이 일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살해 당일에 예정돼 있던 거대한 파업 시위는 파시스트에 반격할 운동을 건설할 기회가 됐다. 아테네에서 열린 시위에서 첫 발언을 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 활동가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스는 사람들에게 파시즘에 맞서 시위에 참가하자고 호소했다.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전했다.



“파블로스를 살려 내라. 나치를 박살내지” 파시즘 반대 투쟁이 건축 반대 파업과 결합했다. 6만 명 이상 모인 9월 26일, 그리스 아테네.

“당시 파업 집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교사대열이 지나가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노동자, 보건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대학생들도 참가했습니다. 파블로스는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이 많이 사랑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반면 나치들은 파블로스를 매우 증오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블로스가 살해당한 데 분노했습니다.”

18일 저녁 그리스 전역에서 분노에 찬 시위가 열렸고, 경찰과의 충돌도 있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케라치니에서 시

위가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가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 최대 야당인 시리자, 아나키스트에, 심지어 그리스 공산당(KKE) 대표단까지 모든 좌파가 시위에 함께했다. 그리스 공산당은 전에는 자기들끼리만 행진했다.

19일과 21일에 더 많은 시위가 있었고, 19일에 열린 파블로스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황금새벽당 당원들은 전에도 이주민들을 공격하곤 했다. 그런데 파블로스가 살해되기 일주일 전에는 황금새벽당 패거리가 공산당 소속

노조 활동가들을 공격했다.

심지어 그리스 현직 군인들이 황금새벽당 민병대의 훈련을 도왔다는 혐의가 제기돼 수사 중이다. “두 양극단”인 극우와 극좌가 공생관계라던 그리스 정부는 입장을 바꿔, 이제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헌신하는 모든 정당이 황금새벽당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나치에 맞선 대안

정부는 황금새벽당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목해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

다. 시리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건축정책이 낳은 절망 때문에 황금새벽당이 성장한 것이다. 이런 절망에 맞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파업 물결이다.

파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나치를 방치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이나 정부와의 협력으로 나치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와 힘을 합하려고 파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루카스는 말했다. “항의 운동은 정확히 파블로스가 원했을 방향으로 진전돼 왔습니다. 황금새벽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조차 그들이 나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역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우리는 파업과 시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야말로 나치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블로스도 우리가 계속 나아가길 바랄 겁니다.”

페트로스에게 연대를 보내자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은 그리스에서 파시즘에 맞서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주요 조직이다.

KEERFA의 소집자이자 아테네 시의원인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스는 유인물에 파시즘에 반대하는 주장을 쓰고 경찰의 이주민 탄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페트로스를 방어하는 국제 서명운동이 현재 진행 중이다.(<http://bit.ly/19adxHQ>)

KEERFA는 10월 5~6일 아테네에서 반파시즘 투쟁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72호 / 번역 최병현

서평 | 《법정콘서트 무죄》

지난번 마녀사냥을 돌아보고 배우기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내란음모죄라는 역사책에만 남아 있을 것만 같았던 용어를 언급하며 이석기 의원을 압박했지만, 머지않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들춰내고야 만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뿌리 깊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진가 이시우, 그 역시도 2007년에 국가보안법의 20개 조항 위반이라는 경악할 기록을 세우며 탄압을 받았다. 이 책은 이시우 씨와 그를 변호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대담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 이길 수 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 읽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검찰의 수사에 진술거부권, 일명 묵비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권으로 당연한 것이다. 사진가 이시우 씨도 수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책에서도 이정희



《법정콘서트 무죄》 최진섭, 이정희, 이시우 지음, 도서출판창해, 360쪽, 17,000원

대표는 “완벽한 묵비가 1백 명의 변호사보다 낫다”고 할 정도다.

또한 이시우 씨 재판 때는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예술단체, 진보단체, 해외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모인 탄원서가 당시 재판관에게 ‘민간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압박을 줬다고 한다. 이러한 결집된

연대가 큰 힘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재판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걸맞게 그동안 자신이 공부해 온 미학, 철학, 사학 등을 통해서 재판장에서 자신의 사진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검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바꿔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1백명의 변호사

또, 책에 나온 대답자들이 당시 재판을 준비하면서 보인 주도면밀한 체계성에서 다시 한번 깊은 깨우침을 얻는다. 사진가 이시우 씨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차대전 이전에 벌써 독일로 이탈리아로 일본으로 수입되어 일본의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거의 그대로 따 쓴 게 한국의 국가보안법이지 든요. ... 이제 남북 간의 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의 패권 문제, 세계 패권의 문제가 조정되는 과정을 아주 깊이있

게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그런 관점을 지니게 되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세계적 맥락의 변화, 현실의 변화와 더불어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바탕 아래서 여론을 바꾸고, 사회 환경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필요없게 만들어야겠지요. 저는 이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시우 씨는 이번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사태에 대응해 〈통일뉴스〉에 긴급하게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지배권력의 종북공세에서 1차 정치적 관문을 돌파하는 길은 ‘우리는 진보당과 달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 우리의 단합이 굳건히 정치문제의 1차 관문을 통과할 때 청와대와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번 내란음모사건이 대박이 아닌 쪽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탄압은 어느새 전교조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앞으로 국정원에 맞선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시 한 수 남기고자 한다.

이우성

독일에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나다.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나다.

에밀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마틴 니묄러, ‘나는 침묵했습니다’



시리아 공습 계획 연기

미국의 전술 변화와 끝나지 않은 위험

차승일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일단 미뤄졌다. 9월 14일 미국과 러시아가 한 합의 때문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9월 21일까지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공개하고, 11월까지 국제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화학무기 폐기를 완료해야 한다.

9월 20일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보고하며 이 합의가 실현의 첫 걸음은 뎌 듯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애초의 군사적 개입 계획을 접고 '정치적 해법'으로 돌아선 것은 우선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미국은 시리아 공격을 위한 국제적 동맹 구축에 실패했고, 오바마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사실,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군사적 개입을 두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 자체가 오바마의 궁색함을 드러냈다.

오바마는 의회 승인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기보다는 명분 쌓기용 시간을 벌려고 전술적 변화를 꾀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패배로 말미암은 위상 약화, 경제 위기 속에서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는 처지, 2000년대 초 강력한 반전 운동이 남긴 광범한 반전 정서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번 합의 자체가 미국에 새로운 난제를 던져 줄 수도 있다.

이번 합의를 배경으로 이란 혁명 이후 30여 년 만에 최초로 정상회담 성사가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이란과 미국 사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당장 이스라엘이 '속임수에 속지' 말라며 반발했다. 이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탐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보유 의혹이 떠올랐다.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CIA가 1983년 작성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비축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서명했으나 20년이 지나도록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의는 그리 안정적이지 않다.

우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1천 톤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관 시설은 40곳이 넘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화학무기를 1년 안에 모두 폐기하

오바마는 의회 승인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기보다는 명분 쌓기용 시간을 벌려고 전술적 변화를 꾀했을 것이다

는 것은, 더구나 내전 상황에서 그리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이 기술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연결된다. 화학무기 폐기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서방이 무력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미국·영국·프랑스는 시리아 정부의 실전을 강제할 보장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한다.

오바마는 9월 24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유엔은 국가 간 전쟁을 방지하고자 설계됐지만 국가 내 살육을 방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즉, 오바마는 군사개입 카드를 아직 버리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번 합의는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균열을 보여 준 제국주의 질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서 주도적 구실을 한 러시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 사이 세력 관계의 변화 조짐은 2008년에도 있었다. 2008년 8월 러시아는 미국의 총선 그루지야를 군사적으로 패퇴시켰다. 냉전 종식 후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해 러시아를 봉쇄·압박 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좌절을 준 것이다.

옛 소련 영토 밖 유일한 군사기지를 시리아에 두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의 시도를 지연시켰다.

그러나 미국에 견줘 러시아의 GDP는 7분의 1, 군사비 지출은 6분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최근 상황은 러시아가 세계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몇몇 중요한 지역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또, 제국주의 간 경쟁 속에서 미국 우위의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도 보여 준다.



기관총과 장갑차로 무장하고 '구호 활동'?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주둔 유엔군.

혁명에 악영향만 끼친 공격 시도

미뤄지긴 했지만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개입 위험은 이미 시리아 혁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 혁명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에멘식 해법', 즉 아사드는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지만 정권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학가스를 사용하는 지도자는

정당성을 다시 얻을 수 없다. ... [그러나] 시리아 국민들은 국가 기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는 시리아 정부에 화학무기 폐기 책임을 맡김으로써 정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효과도 났다.

이번 합의대로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모두 폐기되더라도 평가가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없이도 2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

반면 저항군 내 분열은 커졌다. 시리아 국민위원회(SNC) 등 친서방 세력은 미국의 군사개입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는 부대들은 혁명에 맞선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미국과 서방의 공격이 아사드 정권은 물론이고 자신들까지 겨냥할 것이라며 전선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이제는 혁명 세력에게로 총부리를 돌린 것이다.

유엔이 개입하면 나으는가

8월 말과 9월 초 시리아 공격 위협이 고조됐을 때 독일과 반기문 등은 유엔 승인 없는 공격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시리아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화학무기 폐기를 감독할 조사단이 시리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사단을 보호하려면 무장 병력이 7만 5천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 조사단과 병력이 하는 구실은 유엔

이 그동안 벌인 추악한 짓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1946년 창설 직후 유엔이 처음 한 일은 "강제국가" 이스라엘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1992년 소말리아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은 학살과 테러를 일삼았다. 당시 유엔군 소속 병사들이 소말리아인 소년을 산 채로 불에 굽는 장면을 큰 충격을 줬다. 이런 개입은 최근 케냐 테러 사건

의 배경이 됐다.

1991년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승인했다. 이 전쟁에서만 이라크인 25만 명이 죽었다. 이후 13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로 어린이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이라크를 상대로 미국은 2003년에 다시 전쟁을 벌여 1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유엔은 얼마 뒤 이 전쟁도 승인했다.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제국주의 개입이 낳은 참사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참사를 그저 물지각한 테러로 볼 수는 없다. 소말리아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 알샤바브가 저질렀다고 밝힌 이 계획적인 공격으로 60명 이상이 죽었고, 거의 2백 명이 다쳤다.

2011년 10월 케냐군은 이웃 나라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이에 대응해 알샤바브와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50번 넘게 벌였고 이 때문에 적어도 70명이 사망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알샤바브의 공격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우간다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2010년 월드컵 결승전 날 밤, 폭탄이 여러 발 터져 6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희생자는 대부분 빈민이어서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케냐인 사회주의자 자히드 라잔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여서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한다. 케냐인 부유층은 대체로 웨스트게이트 같은 쇼핑

몰을 폭력이 난무하고 속 터지는 케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로 여긴다.

혈액 은행

자히드는 이렇게 전했다. "구호의 손길이 몰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고, [넘쳐나는 헌혈 자원자들을 받으려고] 임시 혈액은행이 시내 가장 큰 공원에 세워졌습니다. 테러범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케냐인을 갈라놓으려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쇼핑몰 테러 이후, 케냐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는 국민 통합을 위한 투사인 척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타는 2007년 대선 때 [1천 명 이상이 죽은] 부족 간 분쟁을 일으킨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자다.

1991년 미국의 후원을 받던 독재자 바레가 몰락하면서 소말리아 중앙정부가 무너졌다. 2006년 이슬람법정연맹이 소말리아에서 사실상 정부를 수립했고 알샤바브는 그 소속 단체였다. 이 정부는 미국이 지원한 침공으로 전복됐고, 그 뒤 알샤바브는 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단

체로 변모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룩 와이스조차 알샤바브가 "비교적 온건한 이슬람주의 조직"이었는데 침공 때문에 알카에다 쪽으로 가게 됐다고 논평했다.

2008년 이후 알샤바브가 "초국가적 테러리즘 사상을 점점 더 수용하면서, 서방에 맞서 세계 전쟁을 이끄는 알카에다의 일부를 자처하기 시작했다."

켄 올렌데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371호 / 번역 정다운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9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국·공립대 교액 등록금의 주범인 기성회비가 연이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성회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들은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수업료 대신, 실체가 없는 '기성회'를 만들고 입학료와 수업료의 세 곱질(전체 등록금의 75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걷어 왔다.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올려 온 것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립대 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은 1997년 61.5퍼센트에서 2012년 47퍼센트로 크게 줄었고, 같은 시기 등록금 비율은 31.5퍼센트에서 39.2퍼센트로 높아졌다.

그런데 기성회비 불법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기성회비의 일부로 지급하던 교직원 수당을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국립대 직원들은 1인당 연봉이 9백90만 원가량 깎이게 된다. 교액 등록금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이다.

위선

게다가 교육부는 "기성회 회계에서 수당을 보조하느라 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며 학생과 교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진정한 책임 당사자인 교육부는 은근슬쩍 발을 빼면서 말이다. 심지어 교직원 수당을 삭감해 줄어드는 등록금은 고작 학생 1인당 5만 원에 불과해 이조차도 생색내기가.

교육부는 국립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밀어붙이면서 기성회비를 폐지할 것처럼 말했지만, 이것은 분노할 만한 위선이다. 교육부는 임금



사진 출처: 전국대학노동조합

임금 삭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라 9월 13일 국공립대 교직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

삭감과 함께 기성회비를 형태만 바뀌어서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지침을 내린 지 일주일 뒤에 '국립대 재정회계법'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올 연말께 기성회비 반환 소송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정회계법은 기성회 회계와 국고 회계인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회비는 기존 등록금과 합쳐져 오히려 합법적인 등록금이 돼 버린다. 한마디로 회계상에서만 기성회비가 사라지고 등록금은 전혀 줄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인 것이다.

게다가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도 사립대학처럼 이월금을 남겨 적립금을

쌓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대 법인화의 길을 닦는 법이다.

국립대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전국 39개 국립대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대규모 상경투쟁을 진행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노동자들의 항의를 묵살하고 오히려 교육부 방침을 어긴 대학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교액 등록금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 투쟁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받았지만 배신당한 학생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간질과 책임 전가에 맞서 학생과 교직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워 나가자.

김승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7월 5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 39개의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등록금에 분노하던 대학생들은 일제히 분통을 터뜨렸고, 사학연금 환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신대에서도 학교가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 왔다. 이 돈이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 이에 '한신대 민주주의 시국회의'가 주도해서 "등록금 인하를 통한 [사학연금] 환수"를 총투표에 부쳤다.

한편, 감사가 발표되자마자 우파세력은 사학연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하는 ... 학부모와 하류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 대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모든 책임을 교직원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먹튀'한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과 부모모임을 걱정한다는 것은 뻔뻔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사학연금 '대납' 문제는, 교직원들이 부도덕해서 등록금을 자신의 연금으로 대납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립대학재단들이 2000년 이후

교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대신 교직원 개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한신대의 경우도 단체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일부를 법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즉 '대납'한 사학연금은 노동자 임금의 일부인 것이다.

이 문제의 진정한 책임은 자신들의 비용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교비회계에 손을 댄 학교법인과 그동안 이것을 눈감아 온 정부에 있다. 오히려 교직원 노동자들은 학교 당국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로 이미 교직원에게 지급한 지원액을 도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학교법인이 추가출연해서 자기부담금 대납금만큼 등록금 인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이간질하는 논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단결해 서로의 권리를 주

장해야 학교법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신대 민주주의 시국회의'가 환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는 문제의 진정한 책임을 흐려서 이간질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하게 한다. 우리도 동국대 학생들처럼 "사학연금환수는 교직원 개인이 아닌, 법인이 책임져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을 핑계로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려고 한다.

7월 30일 교육부는 총 2천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 대학 중 사학연금 '대납' 대학에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포항공대, 한양대, 인하대,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의 사업비 배정액 10퍼센트를 일괄 삭감하고, 지원할 금액 중 절반은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하는 정부와, 우리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비민주적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대학생과 교직원 노동자가 함께 싸우자.

서정은 한신대학교 학생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에 맞서 지속되는 전면파업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넘게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진짜 사장' 태광 티브로드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한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임금은 고작 1백50만 원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렸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백만 원어치 일하고 1백50만 원 받"아 온 반면, 티브로드는 지난 한 해만 순이익 1천8백8억 원을 올렸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한편 태광 티브로드는 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 인천공항공사, GM대우 등과 함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원청인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사장인 센터장들을 지명하고, 순환 배치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또한 티브로드는 센터장과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인센티브까지 직접 관리해 왔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명백한 '바지사장'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은 간접고용 비중을 늘려 왔다. 고용노동부조차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가량이 간접고용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간접고용은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고, "제조업을 넘어 금융·유통업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

다.(〈경향신문〉)

이 중 상당수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일 가능성도 높다. 이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이런 배경에서 CJ대한통운택배, 삼성전자서비스, 이마트, 다산클러스터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에 나선 것이었다.

반면, 9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 "논란의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불법파견은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었다. 이런 '삼성 바자기'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들에게 선물을 보파리를 안겨 준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판정으로 불뚱이 났까 봐 전전긍긍해 왔다.

이러다 보니 티브로드 사측도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다. 오히려 손수 나서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진짜 사장'이 티브로드라고 인정한 꼴이다.

티브로드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파업 이후 노동조합이 확대되기도 했다. 사측의 이윤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파업 대열을 더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를 위해 연대하자! 10월 11일 2차 희망지하철에도 함께하자!

유병규



사진:이매진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하라! 9월 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주노동자

소중한 이주노동자 동지를 떠나 보내는 아픔

네팔 이주노동자이자 노동자연대다 함께 회원인 동지가 며칠 전 작업장에서 단속돼 곧 한국에서 추방된다.

이 동지는 2003년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서 1년 넘게 벌인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마지막까지 남은 몇 안 되는 리더 중 한 명이었다. 이후 이주노조 건설에 적극 기여했던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활동가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바꾸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은 그를 더 폭넓은 운동으로 이끌었다. 그는 반전운동, 노동자 투쟁에도 함께했다. 2005년 고려대에서 삼성 이견희 박사학위 수여 항의 시위를 벌이다 출교 당한 고려대생들이 농성을 벌였을 때는 다른 네팔 이주노동자들과 음식을 만들어 지지방문을 가는 마음 따뜻한 투사였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고된 삶과 투쟁은 그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는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중단할

수 없었다.

최근까지도 그는 이주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주노조를 후원하며 운동에 참여해 왔다. 또 '맑시즘2013'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 다며 정말 소중한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며칠 전 외국인수용소에서 만난 이 동지는 "활동 많이 못 하고 가서 미안하다"며 다른 동지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

이런 소중한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정말 안타깝다. 정부는 적절한 체류 비자가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20년 넘게 한국에서 산 노동자를 범죄자처럼 수용소에 가두어 버렸다! 어떤 법과 제도도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하는 끔찍한 차별은 이 사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잘 보여 준다.

남아 있는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주하고 체류할 권리를 위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고은이

10월 9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비정규직인 김영성 지회장 후보를 지지한다

10월 8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 1차 투표가 있다. 후보가 지부는 8명, 화성지회는 7명이나 난립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원칙도 없이 하루아침에 집행권을 노리고 뭉치는 일이 벌어지고, 평상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이들이 임원후보로 버젓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금속노조 탈퇴를 주장하는 분들과 금속노조 위원장을 배출한 조직이 연대해서 후보를 출마시키는 모습을 보고 조합원들의 심정이 어떨까? 운동의 이념도 가치도 정체성도 찾기 힘든 것이다.

민주파를 자처했던 이들도 보수파의 대표 주자들과 손을 잡고 출마했다. 이런 행태를 보는 조합원들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 속에서 신선한 외침을 발견할 수 있어 다행이다. 바로 비정규직 신분의 김영성 기아차 화성지회장 후보다. 김영성 후보조의 핵심 공약은 ‘비정규직 없는 기아차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 연대하는 민주노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해체,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박근혜 퇴진’ 등 정치적 주장도 신신하다. 10년 전만 해도 민주파로 분류됐던 현장조직들이 내세웠을 것 같은 공약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주장을 하는 후보는 김영성을 빼고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비정규직이 임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며 반감을 보이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하나로 통합한 후 지금까지 기아차지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긴 했지만 정규직화 투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올해 임투에서도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별도 요구한 1번으로 상정했지만 전혀 성과는 없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커져 왔다.

특히 올해는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 동지가 비관 속에 자결하고 광주공장의 김학중 동지가 ‘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며 분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영성 후보와 정규직 활동가 2명이 함께 화성지회 집행부에 도전한 것은 충분히 지지받을 만하다.

김영성 후보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호로 외쳐온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인지 정말로 절실한 현실의 과제인지! 노동조합 운동의 전진과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바라다면 그 출발로 김영성 후보를 지지하자!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서울 동부지구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역사 되돌리기’ 시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 한규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전공(박사과정 수료)) 김현옥 (전교조 역사 교사)

일시 : 10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 출구) 3층 2강의실

참가비 : 3,500원(학생 2,500원) / 문의 : 010-9840-1236

울산지회

국정원 선거 개입과 마녀사냥 등을 통해 보기 —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구실을 하는가?

연사 : 차승일(레프트21) 기자)

일시 : 10월 1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학생 2,000원) / 문의 : 010-5004-1880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주최하는 대한 마르크스주의 포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무엇이 왜 문제인가?

연사 : 한규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전공(박사과정 수료))

일시 : 10월 2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국민대학교 공학관 별관 217호

참가비 : 2,000원 / 문의 : 010-5678-8630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기 악화로 국가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 위기 시기에 오히려 증가했다. OECD 자료를 보면,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GDP 대비 2007년 19.2퍼센트에서 2008년 19.9퍼센트,

2009년 22.1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예산 1백조 원 시대’라며 떠들어 대지만 2012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9.3퍼센트로 OECD 평균인 21.8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네덜란드와 견줘 한국의 복지는 여전히 형편 없는 수준이다.

떠넘기기

이뿐 아니라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 결국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기업과 부자 등에 대한 감세 정책을 그대로 둔 채 노동자들에게 복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 OECD 평균을 보면, 상위

20퍼센트는 소득의 28퍼센트를 소득세와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에 지불하고, 6퍼센트를 현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순세금으로 22퍼센트를 내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상위 20퍼센트는 시장 소득의 9퍼센트만 세금 형태로 지불하고 2퍼센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순세금으로 7퍼센트만 낸다.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부자들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이것도 모자라 천문학적 금액을 탈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피땀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돈을 더 내서 복지를 확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노동자, 서민은 ‘노동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장미순

주체사상을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이 섬뜩한 이유

이석기 의원 국정원 체포 사태를 놓고 진보진영 일부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주체사상과는 커밍아웃하라”는 주장에서부터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주장까지. 분열해 온 진보의 역사가 남긴 서로에 대한 분노의 생채기는 그만큼 깊다. 그러나 그 상처를 국정원의 힘을 빌려 아물게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겨레〉칼럼니스트 박권일은 “이석기 사태의 본질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침해일까?’”라고 묻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 총기 제조 및 시설물 파괴 등을 계획한 구체적 행위”라고 했다. “이석기 의원 스스로 사상과 신념을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상과 신념을 공표”하지 않는 것을 은근히 비난하고 “기만의 대가”를 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사회주의자요’ 하고 몇몇 사회주

의자가 당당히 외쳤듯, 자신의 ‘주체사상’을 “공표”하라는 것이다. 박권일은 국가보안법의 서술 퍼런 칼날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커밍아웃하고 감옥에서 살아라’ 하고 강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사상을 “공표”하지 못하는 것은 “기만”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선택’일 뿐이다. 이 “기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국가권력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부터 나와 당당히 수사에 임하라” 하고 “헌법을 지키는 정의로운 진보”를 말했다.

그렇다면 1980년 헌법을 지키지 않고 총을 들었던 광주의 민중은 “정의로운 진보”가 아니었던 것일까? 1987년 ‘호헌 철폐’를 외치며 돌과 화염병을 들었던 민중은 “정의로운 진보”가 아니었던 것일까?

지금의 “헌법”은 “정의로운 진보”를 지켜주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진보는 ‘국정원’에 의해 판단되고 ‘국정원’에 의해 끝

려가 “수사에 임”해야 하는 것인가?

박권일은 “국정원의 공안 탄압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태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관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일부 엔엘 세력 역시 기만의 대가”라며 “얼음처럼 냉정해야 한다. 저 기만의 대가들에게 기만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태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관점”은 ‘이석기 종북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것이다.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지만, 그 “비판”이 ‘누구의 손’에 의해 이뤄지는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중에 의해 판단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기만의 대가(大家)”인 국정원의 손으로 “기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진보로서 할 일이 아니다.

안철환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감옥에 갇힐지언정 불의한 군대에 가지 않겠습니다”

사회운동 활동가인 조익진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그 소견서를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조익진 씨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보내주기 바란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 볼 수 있다.

저는 국가로부터 10월 8일 입대 명령을 받은 28세 청년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군대가 1퍼센트의 이익을 위해 99퍼센트의 삶과 평화를 희생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열강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국가 간 경쟁을 위해 군대를 이용했습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1백여 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미국은 아랍혁명에도 개입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베트남에는 수십 개의 한국군 증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대가 기억하리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은 이후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소말리아 등지에서 강대국의 패권 추구 행위에 동참했습니다.

‘국격’과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평범한 민중이 얻은 것은 늘어난 테러 위협과 파병국의 국민이라는 오명뿐입니다.

최근에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더 적극적인 소 패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팽배 미군기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주민들의 반대까지 억누르며 강행했습니다.

MD

한국은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군사 훈련에 임하고 있고, 미사일방어체계(MD)도 물밑에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 역시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복지재원은 없다며 노동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나 복지 공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인 군사 전략을 통해 인류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평화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급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는 진보적 신념을 가진 사회주의자로서, 신념

을 꺾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갇힐지언정 1퍼센트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비양심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은 군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끌려가 2년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비양심이 아니라 1퍼센트의 도구인 군대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반대로 가진 자들은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갖은 수로 병역을 피해갑니다.

이 나라는 모병제 도입은커녕 대체복무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1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의 90퍼센트 이상이 한국에 갇혀 있습니다.

권력과 체제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신념이라도 이를 지킬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라도 부합하는 나라라면, 당장 징총과 병역을 거부할 자유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조익진

투쟁과 연대로 전교조 탄압 막아 내자

규약시정명령은 거부해야 한다

조수진 전교조 전국 대의원

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을 들이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고자 9명의 가입과 활동 중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익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 무시하며 학생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초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칼을 빼든 의도는 분명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정국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공격도 그 연장선이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는 하반기 목표를 ‘경제 활성화’로 내걸고 재벌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교원평가 법제화, 시간제 교원 도입을 예고하는 등 교육에 대한 공격도 준비중이다. 그리고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검정 승인 등을 통해 국가중심주의 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칼을 빼든 이유다. 즉, 민주노총의 핵심 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교조를 공격해 전체 노동운동을 위축시켜 저항의 예봉을 꺾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따라서 김정훈 위원장이 9월 25일 관훈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를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은 옳다. 이 주장이 진정 책임 있게 현실이 되는 길은 지도부가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적 규약 개정을 거부하는 입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은 1987년 이후 민주화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9월 26일 수도권교사 총력투쟁 전포식.

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해고자 9명 때문에 법외노조를 감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규약을 개정해 일단 소나기를 피해 보자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먼저 있고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한 예로, 미국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 활동가 출신인 레그 테리오가 쓴 《노동계급은 없다》(실천문학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어느 날, ILWU의 강성 활동가가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려 하자, 사측이 이를 막았다. ILWU는 이 단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결국 지침을 철회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단지 해고자 9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수용해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면, 다른 조합원들도 징계·해고도 무릅쓰고 조합의 결정에 따라 투쟁에 나서길 주저하게 될 것이다. 올해 공무원노조의 쓰디쓴 사례는 실

용주의적 접근이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에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개악해 설립 신고를 냈지만, 정부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크게 흔들린 틈을 타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안을 발표했다. 어떤 노조가 필요한가 물론, 법외노조가 되면 타격이 클 것이다. 단체협약을 맺지 못할 것이고, 노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끊길 것이며 무엇보다 조합원 수가 감소할 수 있다.(그렇다고 법외노조가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1989년 때처럼 노조 가입이나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가투쟁 등 전력 투쟁을 통해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그럼에도 설사 법외노조로 내몰릴지라도 규약 개정을 거부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모름지기 노동조합은 단결력과 투쟁

력이 강력한 때 노동자들의 조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격에 굴복해서 법내노조 지위만 지킨다면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자기저하와 위축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 되면 정부가 과연 그런 노동조합을 겁내겠는가. 그런 상태라면 정부가 전교조와 단체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전교조가 굳건하게 원칙을 지킨다면 비록 일시적으로는 조합원 감소 등 어려움을 겪겠지만 운동이 전진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전교조 결성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일시적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투쟁력이 약화되는 등 쓰라린 상처를 입”었지만, “전교조는 사회적으로 교섭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조직의 실체로서 자리 잡았다.”(《참교육 한길로》) 따라서 정부가 이미 시한을 정하고 최후통첩을 한 만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과 해고자 조합원 자격 박탈 요구를 분명

하게 거부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원칙과 투쟁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최종 결정은 10월 19일 대의원대회를 재차 열어 결정하자는 안을 낸 것은 매우 아쉽다. 아마도 지도부는 노동조합의 분열을 우려한 나머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노동조합 내에서는 규약 개정과 찬성으로 입장이 갈려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단결하자’는 생각은 오히려 규약 개정론에 문을 열어 줄 수 있다.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 입장 쪽으로 조합원들을 최대한 결집시켜 조합 내 분열과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강력한 투쟁과 광범한 연대를 건설하며 박근혜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자.

9월 28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의 투쟁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관련 기사는 <레프트21> 웹사이트에 게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각종 분할 민영화법을 부활시킨 것이니까요, 박근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 법안들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철도를 쪼개고 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각종 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각종 지방선 등 새롭게 진입할 운영자에게 면허를 주고, 노선·사업별 회계를 분리해 교차보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시장 경쟁력이 없는 적자 노선에 보조를 안 해 주면 결국 안락사시키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철도의 노선이나 차량에 지역·속도·영업연장 등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요금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는 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정부는 이미 내부 문건에서 등급별 요금제도를 두고 요금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처럼 되는 거죠. 여기서 3개월 전에 예약하면 기존 요금보다 20퍼센트 가량 싸지만, 당일에는 요금이 2백 퍼센트

트나 비싸지거든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에 철도 자산 매각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눈독을 들이는 알짜배기 자산은 인천공항철도입니다. 인천공항철도가 예전엔 민영 철도였는데, 세금만 축내서 결국 1조 2천억 원을 들여 철도공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부채도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항철도의 수요가 상당히 늘었어요. 철도공사가 인수하면서 요금도 떨어지고 환승도 되니까 이용률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걸 다시 팔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철도 자산이 3조 원이 넘을텐데, 이걸 팔아 시설공단에게 빚을 갚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천

공항철도는 다시 민영화됩니다. 이런데도 민영화가 아니라고요? 정부는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새누리당이 우위에 있는 국회에서 이 철도 분할 민영화 법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굳건한 연대가 필요하고, 원내 야당과도 결합해야죠. 바깥의 강력한 전선이 유지될 때 그나마 야당도 저지선을 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에 숨겨진 내용을 얼마나 잘 폭로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기사 7면 인터뷰·정리 박설